

연구자료 D170 / 2003. 3.

---

# 2002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김동원 박혜진

연구자료 D170 / 2003. 3.

2002년

#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김 동 원    전문연구원  
박 혜 진    연구조원

## 머 리 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978년 연구원 개원이래 효율적인 농정 여론 수집을 위해 현지통신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말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와 당해연도 농정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 있다.

이 조사가 실시된 2002년도의 농업 여건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종료와 한·칠레 FTA 협상 타결, WTO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진전 등 농업시장 개방 압력이 그 어느 해보다 거세게 직면한 가운데,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 새정부 탄생을 앞두고 농업분야의 어려운 현안들을 새정부는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관심도 높은 시기였다.

이와같은 여건 하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는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를 비롯해 국민의 정부가 지난 5년간 시행해 온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 새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기대와 요구, 각종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인의 견해를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특히, 개방농정 시대로 돌입한 '93년 UR협상 타결 이후 지난 10년간의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 조사결과가 WTO/DDA 농업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 등 급변하는 대외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정책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이 조사보고서가 농정의 1차 수혜자인 농업인들의 의식 변화에 기초한 농업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바쁜 일정 중에도 많은 문항에 꼼꼼히 응답해 주시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제언을 해 주신 현지통신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2003.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 요 약

- 이 조사는 현장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농업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연구원의 현지통신원 2,058명을 대상으로 매년 말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 조사는 2002년 11월 20일~12월 14일까지 우편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On-Line 조사를 동시에 실시해 867건의 조사표를 회수하였다. 조사내용은 농업인들의 농촌생활과 관련된 의식구조 변화와 함께, 국민의 정부 농정 5년을 평가하고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 쌀산업 구조조정과 농업협상 등 농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중심으로 하였다.
- 2002년에는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종료와 한-칠레 FTA협상 타결, WTO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진전 등 농업분야 개방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농업인들은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을 꼽은 비율이 전년보다 각 4.3%p, 27.2%p나 증가하는 등 농업협상 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2002년 농촌생활 수준이 5년전이나 1년전에 비해서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전년보다 각 4.4%p, 4.5%p 감소해 농촌생활 수준향상 인식에서도 '98년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5년후와 1년 후(2003년) 농촌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전망에서도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농업인이 각 6.5%, 3.1%에 그쳐 농촌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런 가운데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가치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아 응답자 10명중 8명(80.6%)은 농업이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해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56.8%)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 정부’가 지난 5년간 역점 추진했던 주요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농가부채 해소 노력과 농정조직 개편, 친환경농업 육성 등은 대체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 반면, 농산물 가격안정대책과 농업협상 대응, 쌀값 안정대책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는 ‘농가부채 해결방안 제시’(30.0%)를 꼽았고, 집권기간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농업정책으로는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29.8%)을 꼽아 농업인들은 새정부 출범 이후 농가부채 해결과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해 주길 주문하였다.
- 또, 농업인들은 2004년 쌀 시장개방 재협상을 목전에 두고도 벼 재배면적은 ‘현재의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50.8%로 조사되었다. 다만 쌀 재고 증가와 가격하락, 쌀 개방 재협상 등으로 1년새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20.9%p나 감소한 결과를 보여 향후 비교적 규모가 작은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 쌀 감산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농업인이 10명중 1명(9.4%) 정도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성급한 감산정책 보다는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적정생산량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며, 일시적인 과잉현상이므로 소비 촉진 등 재고 해소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 있었다.

- 한-칠레 FTA 비준에 대해서는, 피해보전대책이 마련돼도 농업전반에 부작용이 있으므로 비준에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이 39.5%인 반면,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5.5%)과 피해대책 마련시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48.2%)이 과반수를 넘어 불가피성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농지법에 대해서는 ‘농지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이(71.0%) ‘반대한다’는 의견(21.9%)보다 월등히 높아 농업인들은 대체로 농지규제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난개발을 우려하는 농업인도 상당수에 달하였다.
- 농업·농촌 정보화와 관련해 농가의 컴퓨터 보유율은 54.4%로 나타났다으나, 이중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농가가 40.3%에 달했고, 농업인 10명중 5명은 농업·농촌의 정보화 진전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실제 참여하지는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를 ‘PC활용 미숙’(45.1%)과 ‘정보화 환경 취약’(14.5%) 등으로 꼽고 있어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와 더불어 정보화 인프라도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또, 휴대폰 보유 농업인은 10명중 8명(8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 주거환경 특성상 이동통신 가입률은 상당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었다.

## 목 차

<b>I. 조사 목적 및 방법</b>	
1. 조사 목적 .....	1
2. 조사 방법 .....	2
3. 자료처리 및 분석 .....	4
<b>II.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b>	
1. 농업인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한 의식 변화 .....	5
2. 농촌생활 수준의 향상 여부에 대한 의식 .....	14
3. 농사 만족도 및 농촌거주에 대한 의식 .....	27
<b>III.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b>	
1. 농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요구 .....	39
2. 쌀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 .....	45
3. 한-칠레 FTA협상에 대한 의식 .....	53
4. 농지제도변화에 대한 농업인 의식 .....	55
<b>IV. 농업·농촌 정보화관련 의식</b>	
1. 정보화장비 보유와 이용 실태 .....	62
2. 농업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과 요구 .....	67
<b>V. 기타 의견 및 건의 사항</b> .....	71
<b>VI. 요약 및 시사점</b> .....	81
<b>부록. 「2002년 농업인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조사표</b> .....	87
<b>참고 문헌</b> .....	102

## 표 차례

### 제1장

표 1- 1	지역별 분포 .....	3
표 1- 2	연령별 분포 .....	3
표 1- 3	경작규모별 분포 .....	3
표 1- 4	학력별 분포 .....	4
표 1- 5	영농 경력별 분포 .....	4
표 1- 6	주소득 작목별 분포 .....	4

### 제2장

표 2- 1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 .....	7
표 2- 2	농업에 종사하며 느끼는 애로사항 .....	9
표 2- 3	농촌 생활수준 평가 .....	14
표 2- 4	5년전 비교 농촌생활수준 평가에 대한 연도별 변화 .....	15
표 2- 5	5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에 대한 연도별 변화 .....	17
표 2- 6	5년전 비교 농촌생활에 있어서 향상된 항목 .....	21
표 2- 7	5년전 비교 농촌생활에 있어서 나빠진 항목 .....	22
표 2- 8	5년전 비교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 .....	23
표 2- 9	농업 종사 만족도 .....	28
표 2-10	농업 종사 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	30
표 2-11	농촌 계속 거주 여부 .....	31
표 2-12	이농 시기 .....	34
표 2-13	자녀들에 대한 농업 승계 의향 .....	36



### 제3장

표 3- 1	‘국민의 정부’ 농정 5년 평가 .....	40
표 3- 2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농정 시책 부문별 평가 .....	42
표 3- 3	새정부의 최우선 농정 현안 과제 .....	44
표 3- 4	새정부가 역점 추진해야할 농업정책 .....	45
표 3- 5	쌀 감산정책에 대한 의견 .....	46
표 3- 6	쌀 생산조정제 가입 의사 .....	48
표 3- 7	쌀 재배면적 조정 의향 .....	50
표 3- 8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에 따른 반응 .....	51
표 3- 9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부정적인 이유 .....	52
표 3-10	한-칠레 FTA 협상내용 인지 정도 .....	53
표 3-11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한 의견 .....	54
표 3-12	향후 FTA 협상전략에 대한 의견 .....	55
표 3-13	농지에 대한 가치 인식 .....	56
표 3-14	농사를 그만둘 때 농지 처분 방안 .....	57
표 3-15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	59
표 3-16	농지규제 완화 찬성 이유 .....	60
표 3-17	농지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 .....	61

### 제4장

표 4- 1	PC통신 및 인터넷 경험 유무 .....	64
표 4- 2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 용도 .....	65
표 4- 3	농업인들의 정보입수 경로 .....	66
표 4- 4	농업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 .....	68
표 4- 5	농업인들의 정보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	69
표 4- 6	농업인들의 정보화와 관련한 요구 .....	70

## 그림 차례

### 제2장

그림 2- 1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항 변화 .....	13
그림 2- 2	미래의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전망 .....	17
그림 2- 3	5년후 농촌과 도시생활 비교 전망 .....	18
그림 2- 4	5년 전과 5년 후 농촌생활수준 평가와 기대 변화 .....	19
그림 2- 5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견해 .....	25
그림 2- 6	미래 농업·농촌에 대한 역할 .....	26
그림 2- 7	농업 종사 만족도 저하 요인 .....	29
그림 2- 8	농촌 거주 이유 .....	33
그림 2- 9	농촌을 떠나는 이유 .....	35
그림 2-10	농사 만족도와 농업 승계 의향 변화 .....	38

### 제4장

그림 4- 1	정보화 장비 보유 실태 .....	63
그림 4- 2	정보화 장비별 보유율 .....	64

## I. 조사 목적 및 방법

### 1. 조사 목적

- 이 조사는 연구원의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매년 말 당해연도 농업여건 변화 등을 포함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의식변화를 파악해 현장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매년 조사된 결과를 비교·분석해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변화에 따른 농업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실시하고 있다.
- 2002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는 농업인들의 농촌생활과 관련된 의식구조 변화와 함께, 국민의 정부 농정 5년을 평가하고 새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요구 등을 조사하여 농업인들은 개방화 시대에 정부의 농정 방향과 기조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달라진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농업정책 연구에 참고 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 이와 함께, 쌀 수입개방 협상을 앞두고 농업인들은 쌀산업 여건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지난해 협상 타결된 한-칠레 FTA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농업인 반응과 요구, 농지제

도 변화에 대한 의식, 농업·농촌 정보화 관련 의식 등 44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여 농정현안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코자 하였다.

## 2. 조사 방법

### 2.1. 조사 시기 및 대상

- 이번 조사는 지난 2002년 11월20일부터 12월14일까지 당연구원 현지통신원 2,058명에게 우편과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한 On-Line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응한 867건(회수율 42.1%)의 조사표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2.2. 분석 대상자 분포

- 분석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전남이 149명(17.2%)으로 가장 많아 전년과 같았고, 연령별로는 60대가 343명(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50세 미만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의 23.9%에 달했다. 경작규모별 분포는 1.5ha 이상이 471명으로 전체의 과반수를 넘었고, 3ha 이상도 168명(19.5%)에 달하였다.
-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중졸(30.2%)과 고졸(46.0%)이 대다수였고, 대졸(퇴) 이상도 78명이 응답하였다. 영농 경력별 분포는 20년 이상이 89.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년 미만은 1.1%에 지나지 않았다. 주소득 작목별 분포는 수도작이 50.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수(14.4%), 축산(11.0%), 시설원예(9.4%), 특작(6.9%), 노지채소(6.5%) 순으로 집계되었다.

- 유효한 설문지 867건을 지역, 연령, 경작규모, 학력, 영농경력, 주소소득목별로 세분하여 집계한 자료는 아래 표(1-1~1-6)와 같고, 각 문항별 무응답은 제외하였다.

표 1-1.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응답자	90	64	66	126	98	149	131	126	17	867
비율	10.4	7.4	7.6	14.5	11.3	17.2	15.1	14.5	2.0	100.0

주: \* 인천은 경기, 부산·울산은 경남, 광주는 전남, 대구는 경북으로 합산.

표 1-2.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계
응답자	204	216	343	89	852
비율	23.9	25.4	40.2	10.5	100.0

표 1-3. 경작규모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없다	1,500평 미만	1,500~3,000평	3,000~4,500평	4,500~6,000평	6,000~9,000평	9,000평 이상	계
응답자	4	41	155	188	152	151	168	859
비율	0.5	4.8	18.0	21.9	17.7	17.6	19.5	100.0

1. 조사대상자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들은 농촌에서 독농가로 인정되는 농업인과 각지역 농·축·임협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업인들로, 이들이 그 지역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 분포나 경작규모, 연령, 학력 등의 분포로 볼 때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이들의 의사가 반드시 전체 농업인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전제로 해야한다.

표 1-4. 학력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무학	한학	국졸	중졸	고졸	대졸(퇴)이상	계
응답자	1	10	114	258	392	78	853
비율	0.1	1.2	13.4	30.2	46.0	9.1	100.0

표 1-5. 영농 경력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10년 미만	10~20년미만	20년 이상	계
응답자	9	81	770	860
비율	1.1	9.4	89.5	100.0

표 1-6. 주소득 작목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계
응답자	428	123	55	93	80	59	14	852
비율	50.2	14.4	6.5	11.0	9.4	6.9	1.6	100.0

### 3. 자료처리 및 분석

- 자료 통계처리는 SAS 통계 패키지와 엑셀 통계프로그램 ‘피벗테이블 보고서’를 이용하였다.
- 분석 방법은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과 농정평가 등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연령·경작규모·학력·농사경력 등을 독립변인으로 교차분석해 계층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이번 조사결과와 '93년 이후 조사결과를 일부 대비하여 연도별 의식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 Ⅱ.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

### 1. 농업인들의 영농활동과 관련한 의식 변화

- 매년 농업인들이 농사와 관련해 어떤 요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당해연도의 농업 여건을 가늠하고, 차기년도 농업정책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어야 할 지 방향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농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항목에 대한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농정 요구에 대한 시대변화를 파악코자 하였다.

#### 1.1. 관심 사항 변화

- 2002년 농업인들의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가격’(28.0%) 변동에 가장 민감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나, 지난해(33.3%)보다 관심정도는 약간 줄었고, 반면에 한-칠레 FTA협상 타결과 DDA 농업협상 진행 등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 강화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은 2001년 17.4%에서 2002년 21.7%로 상승했으며, ‘농가부채’에 대한 관심도는 2001년 크게 낮아졌다가 다시 소폭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 이밖에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은 양곡유통위원회가 최초로 수매가 인하안을 제시했던<sup>2</sup> 2001년 25.4%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가 2002년에는 15.9%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지면서 인력문제가 전년보다 배 정도 증가한 6.4%를 기록했고, 태풍피해가 컸던 점이 반영돼 기후와 관련한 관심도 7.2%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반면, 농자재와 영농시설 현대화 등 생산관련 관심도는 최근 3년간 1~2%대의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표 2-1)
- 농사와 관련한 관심 사항 변화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농산물 가격’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도는 ‘95년부터 2002년까지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나타났고, ‘추곡수매’ 문제는 ‘97년부터 2000년까지 한자리수를 유지해 오다가 2001년 조사에서는 25.4%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이후 2002년에도 16%대의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쌀산업 여건 변화와 관련해 농업인들의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은 ‘99년 10.1%를 기록 한 이후 매년 3~4%씩 지속적으로 높아져 FTA논의 급진전과 DDA협상이 본격화 된 2002년에는 21.7%를 기록하여 농업인들이 농산물 수입개방 등 통상협상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영농자금·농가부채’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은 ‘98년 이후 여전히 두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어 정부의 부채관련 정책에 민감히 반

---

2. 2001년 양곡유통위원회는 최초로 2002년산 추곡수매가를 4~5% 인하하자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는 동결 결정을 내렸다.



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정부의 농가 부채경감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던 2001년에는 관심도가 약간 줄었다가 다시 2002년에는 전년보다 관심도가 약간 상승한 16.6%를 기록하고 있다.

표 2-1.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 (복수 응답)

단위: 명, %

구 분/년도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농산물 가격	480(28.0)	33.3	35.4	28.8	27.8	31.6	31.1	27.5	19.3
추곡수매	273(15.9)	25.4	8.5	6.1	6.6	7.3	20.2	16.2	21.5
영농자금농가부채	284(16.6)	13.2	22.7	18.9	23.1	9.6	7.9	13.0	11.7
농산물 수입개방	373(21.7)	17.4	14.6	10.1	5.7	17.3	16.4	14.9	20.7
농촌지역개발	23( 1.3)	1.3	2.2	3.3	3.7	15.0	4.8	6.1	6.4
농촌 인력	109( 6.4)	3.0	4.3	6.7	4.0	16.2	9.2	9.6	8.1
농작물병충해, 기후	124( 7.2)	4.0	8.6	19.2	20.4	2.5	3.1	7.3	6.0
농기계 등 농자재	9( 0.5)	0.3	1.4	2.2	4.3	0.2	1.2	1.1	1.3
영농시설 현대화*	3( 0.2)	0.4	0.3	1.9	1.4	0.1	2.0		
농지문제	37( 2.2)	1.8	2.0	2.8	3.0	0.2	4.1	5.5	5.6
합 계	1,71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6년 이후 조사 반영

- 이와 같은 경향을 종합해 보면, 농업인들의 관심사항은 최근 수년간 농가 수익과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세계경제 구조 재편 등 통상협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1.2. 애로 사항 변화

- 농사에 대한 애로사항 조사에서는 2002년도 조사결과가 예년에 비해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변화는 농산물 시

장 개방이 현실화되면서 ‘수입개방’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농가가 전체의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는 '94년 UR협상 타결 이후 한자리수를 유지해 온 것에 비하면 매우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 반면, 2000년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던 ‘농산물 가격 불안정’은 17.8%로 ‘수입개방 문제’와 ‘기상·기후조건’ 다음으로 밀렸고, ‘영농자금·농가부채’를 애로사항으로 꼽은 농가도 2001년 15.1%에서 2002년 1.5%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이 반영돼 ‘기상·기후 조건’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농가는 23.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농촌인력 부족’ 문제도 '98년 이후 가장 높은 17.2%를 기록하면서 대체로 전년도와 비교해 애로사항으로 꼽는 항목들이 많은 변화를 보였다.
- 이밖에, 쌀값 하락으로 농지가격이 떨어지면서 ‘농지문제’를 애로사항으로 꼽은 농가도 2001년 0.5%에서 7.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2)
- 농업에 종사하며 느끼는 애로사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94년에는 ‘기상·기후조건’, '95년에는 ‘농촌인력 문제’, '96년과 '97년에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 '98년과 '99년에는 ‘기상·기후 조건’이라고 응답하였다. 2000년에 이어 2001년에는 다시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고 답했으며, 2002년에는 ‘수입개방’을 꼽았고, 그 응답 비율도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대체로 농산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 조건’과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수입개방 논의가 본격화된 2002년에는 개방에 따른 피해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촌인력 부족 문제도 농업인들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2-2. 농업에 종사하며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명, %

구 분/년도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농산물 가격 불안정	154(17.8)	47.3	37.1	16.6	17.3	43.9	39.5	25.3	19.1
영농자금·농가부채	13( 1.5)	15.1	24.4	22.7	23.5	20.3	15.3	16.0	13.6
농촌인력문제	149(17.2)	14.2	12.7	13.4	8.8	18.9	30.5	30.1	24.5
농작물병충해*	1( 0.1)	2.4	5.0	5.5	9.0	6.7	2.8		
기상기후조건	205(23.7)	15.0	16.6	37.9	38.7	5.7	6.1	21.8	34.3
수입개방	273(31.6)	4.4	2.6	2.0	1.0	3.4	4.5	2.0	4.1
농사정보 부족**	5( 0.6)	1.0	1.2	0.9	0.7				
농지문제**	62( 7.2)	0.5	0.4	0.9	0.9				
기타	3( 0.3)	0.0	0.0	0.0	0.1	1.2	1.3	4.7	4.4
계	865(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6년 이후 조사. \*\* '98년 이후 조사

### 1.3. 농업인들의 관심사항과 애로사항 변화 경향

- 농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관심사항은 최근 수년간 ‘농산물 가격’, ‘추곡수매’, ‘영농자금·농가부채’, ‘농산물 수입개방’에 집중되고 있는데, 2001년에는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반면, ‘영농자금·농가부채’에 대한 관심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2년에는 ‘농산물 가격’에 대한 관심이 수위를 차지했으나

관심도는 5.3%p 낮아졌다. 대신 한-칠레 FTA 협상 타결과 DDA 농업협상이 본격화되면서<sup>3</sup>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관심이 '93년 UR협상 타결로 35.1%의 최고조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지다가 다시 '99년 10.1%에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2년에는 21.7%로 증가하였다. 이는 WTO/DDA 농업협상이 본격화되고 특히, 한-칠레 FTA 협상 타결로 농가들의 피해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등 대외 개방에 대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향후 FTA체결 확대와 DDA 협상 본격화, 쌀개방 재협상 등의 통상협상 일정을 감안할 때 농업인들의 ‘수입개방’과 관련한 관심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같은 관심사항은 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으로 이어져 ‘수입개방’을 꼽은 농업인이 2002년 31.6%로, '94년 이후 2.0~4.5%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입개방’과 관련해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종료와 한-칠레 FTA 협상 타결로 구체적인 피해 작목 및 규모가 거론됐고, DDA 농업협상에서도 개방폭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개방에 따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3. 2002년 10월 24일 우리 나라는 농업강국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농업분야에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고, 각국의 농업개방폭을 결정하게될 WTO/DDA 농업협상은 2000년 3월 1단계 협상이 시작된 이래 2002년 3월부터 1년 시한으로 세부협상(모델리티 선정)에 들어가면서 농업 선진국들의 개방 압력이 강화되었다.

- ‘농산물 가격’에 대한 관심은 ‘95년 이후 농업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었고, 그 비중도 30% 내외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면 2000년 35.4%를 정점으로 2001년 33.3%, 2002년 28.0%으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쌀값이 소폭 하락한 반면, 축산물 가격의 강세가 이어져 농가판매가격지수가 ‘95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01년 105.3%, 2002년 108.6%로 전망<sup>4</sup>되는 등 호전되고 있는데 따른 반응으로 분석된다.
- 영농 애로사항에서도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한 응답률은 ‘99년 16.6%에서 지속 상승해 2001에는 47.3%를 기록했으나, 2002년에는 17.8%로 29.5%p나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추곡수매’에 대한 관심도는 ‘96년까지 20%대의 관심을 보였으나, ‘97년 이후 한자리수를 유지해 오다가 쌀 값이 하락하고 양곡유통위원회가 최초로 수매가 인하를 건의한 2001년에는 25.4%로 크게 높아진 뒤 역시 양곡유통위원회가 수매가 인하 또는 인상 복수안을 제시한 2002년에는 15.9%로 10%p 정도 줄어 농업인들의 수매가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영농자금·농가부채’ 등 농가 자금사정과 관련한 관심은 ‘94년 이후 10%내외의 관심도를 보이다가 우리 나라가 IMF체제에 들어간 ‘98년 23.1%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 2000년까지 20%대의 비교적 높은 관심도를 유지 하였다. 다시 2001년에는 농가부채경감 특별법 등 부채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농가소득 증가보다 더 높은 10%대 이상의 증가세를

---

4. 농협조사월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치.

보였던 부채증가율이 0.8% 증가로 둔화되면서 관심도가 13.2%로 급격히 낮아졌으나, 2002년에는 농가부채 문제가 다시 쟁점화 되면서 16.6%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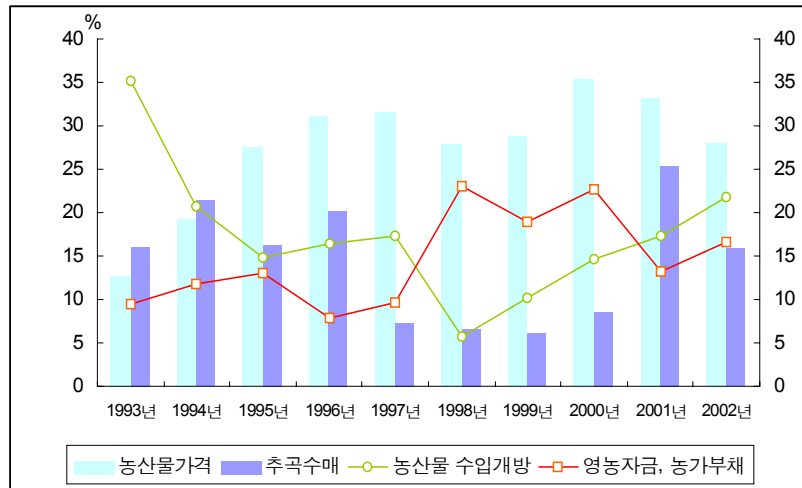
- 결국 농가부채 문제는 농가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가추세가 둔화된 것으로 농가부채의 안정상태는 농가경제 호전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sup>5)</sup>, 2002년에는 상환기일 도래 등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부채 문제가 다시 부상하면서 농민들의 높은 관심사항으로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림 2-1)
- 반면, ‘영농자금·농가부채’ 문제가 영농시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농가는 전년(15.1%)보다 크게 낮아진 1.5%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응답률로 기록되었다.
- 이밖에, 영농시 애로 사항으로 꼽은 항목 중 특이한 사항은 ‘기상·기후 조건’을 꼽은 농가 비율이 ‘수입개방’(31.6%) 다음으로 높은 23.7%를 기록 했는데, 이는 2002년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농촌인력문제’도 17.2%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일손부족 문제는 여전히 영농시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같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농업인들은 '94년 UR 출범 이후 개방농정시대를 맞아 농산물 가격 불안정, 추곡수매가격

---

5. ‘농업전망 2003’ 제5장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편에서 인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결정, 영농자금과 농가부채 문제, 농산물 수입개방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한편, 영농시 애로사항으로도 꼽고 있으며, 특히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1. 농사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항 변화 (연도별)



-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한 농업인들의 관심과 애로사항 변화는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2년 개방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의 수입개방과 관련한 이같은 반응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FTA체결 확대, DDA협상 및 2004년 쌀 재협상 등과 맞물려 농업인들의 개방 논의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농촌생활 수준의 향상 여부에 대한 인식

- 농업인들의 농촌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비해 농촌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평가하는지, 그리고 농촌생활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또 연도별 변화 경향 분석을 통해 최근 10년간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 보았다.

### 2.1.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평가

- 2002년 농촌의 생활 수준이 5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16.4%가 ‘5년전에 비해 향상되었다(매우 좋아짐, 약간 좋아짐 합산)’고 응답해 전년 조사결과에 비해 4.4%p 낮아졌고, 여전히 절반이 넘는(50.2%) 응답자는 ‘못해졌다(약간 못해짐, 매우 못해짐 합산)’고 응답하였다.

표 2-3. 농촌 생활수준 평가

단위 : 명, %

구 분	5년전 대비	전년 대비
매우 좋아짐	12( 1.4)	3( 0.4)
약간 좋아짐	130(15.0)	41( 4.7)
마찬 가지임	289(33.4)	387(44.7)
약간 못해짐	256(29.6)	330(38.2)
매우 못해짐	178(20.6)	104(12.0)
합 계	865(100.0)	865(100.0)

- 전년(2001년) 생활과 비교해서는, 농촌의 생활 수준이 ‘좋아졌다



(매우 좋아짐 포함)'는 응답이 5.1%로 전년에(9.6%) 절반 가까운 응답률을 보여 별로 나아진게 없다는 여론이 대부분 이었고, '못해졌다'(약간 못해짐, 매우 못해짐 합산)는 응답이 역시 50.2%로 절반을 상회하였다.(표 2-3)

-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을 5년전과 비교해 농업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94년 이후 결과와 비교해 살펴보면, 현재의 생활 수준을 5년전보다 향상되었다고(매우 좋아졌다, 약간 좋아졌다 포함) 응답한 비율은 '94년부터 '97년까지 40~60%대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 UR 이후 농촌 투자 확대에 따른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나, '98년 IMF 체제에 들어서면서 농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자 이같은 긍정적인 인식이 하락해 2002년에는 16.4%로 낮아지면서 여전히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표 2-4)

표 2-4. 5년전 비교 농촌생활수준 평가에 대한 연도별 변화

단위 : 명, %

구 분/년도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매우 좋아졌다	12( 1.4)	2.9	1.4	2.9	3.9	6.4	7.8	7.4	8.0
약간 좋아졌다	130(15.0)	17.9	13.7	28.5	22.9	34.2	45.9	52.5	51.8
향상 (소 계)	142(16.4)	20.8	15.1	31.4	26.8	40.6	53.7	59.9	59.8
마찬가지이다	289(33.4)	30.6	31.6	36.8	26.7	28.1	30.8	29.6	28.9
약간 못해짐*	256(29.6)	29.0	27.7	22.7	30.5				
저하되었다	178(20.6)	19.6	25.6	9.1	16.0	31.1	15.5	10.5	11.3
합 계	865(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8년 조사항목 신설

- 이 같은 결과는, 농촌생활 수준의 도시와의 상대적인 격차 심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03’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실질소득이 8.6%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농가의 실질소득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2.3%만 증가하여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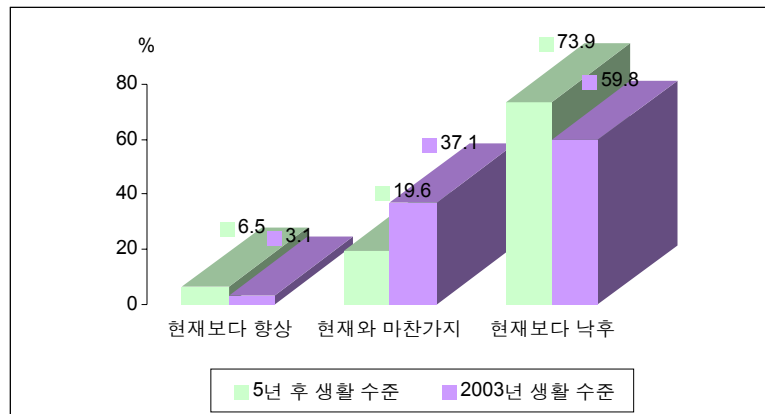
## 2.2. 농업인들의 미래 농촌생활 수준 전망

- 농촌생활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 농업인들은 앞으로 5년 후의 농촌생활을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전체의 6.5%에 그쳤고, 반면에 73.9%는 ‘현재보다 낙후될 것’으로 전망해 10명중 7명은 미래 농촌생활 수준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였다.
- 내년(2003년) 농촌생활 수준은 현재(2002년)와 비교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질문한 결과는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3.1%에 그친 반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9.8%는 ‘현재보다 낙후될 것’으로 전망하여 역시 1년후 농촌 생활 수준 전망도 부정적인 응답이 압도적이었다.(그림 2-2)

---

6. 도·농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의 비율은 1994년에 99.5%로 비슷한 수준에서 점차 하락하여 1997년에 90% 이하로 하락하였고, 2001년에는 급기야 75.9%로 그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미래의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전망



- 농업인들의 5년 후 농촌생활 수준 전망에 대한 '95년 이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WTO체제가 출범한 '95년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 비율이 29.9%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99년까지 20~30%대의 수준을 유지해 오다 2000년 들어 갑자기 9.2%로 낮아진 이후 2001년 4.4%에 이어 2002년에는 6.5%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표 2-5)

표 2-5. 5년 후 농촌생활수준 전망에 대한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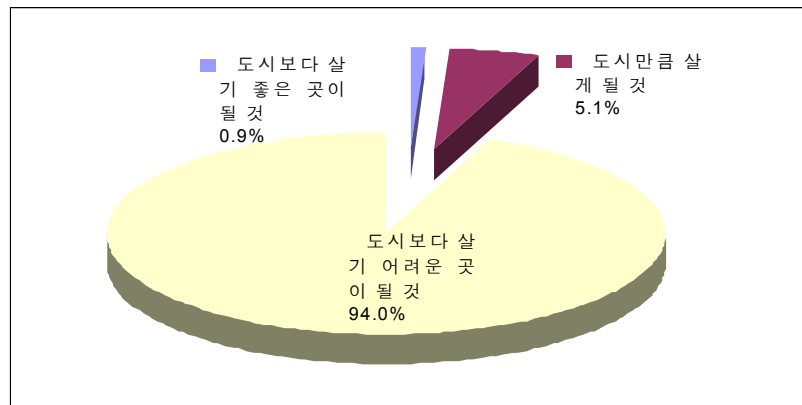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년도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현재보다 향상	56( 6.5)	4.4	9.2	23.1	31.4	20.0	22.3	29.9
현재와 마찬가지로	169(19.6)	14.6	25.7	38.0	36.9	27.5	37.3	36.9
현재보다 낙후	638(73.9)	81.0	65.1	38.9	31.7	52.5	40.3	33.2
합 계	863(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또한, 농촌과 도시 생활 격차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 조사 결과

에서도 5년 후 농촌의 생활이 도시와 비교해서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답한 농업인은 0.9%에 지나지 않았고, ‘도시만큼 살게 될 것’이란 응답률은 5.1%에 그친 반면, 대다수인 94.0%는 ‘도시보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라고 답해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적 이었으며, 그 비율도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3)

그림 2-3. 5년후 농촌과 도시생활 비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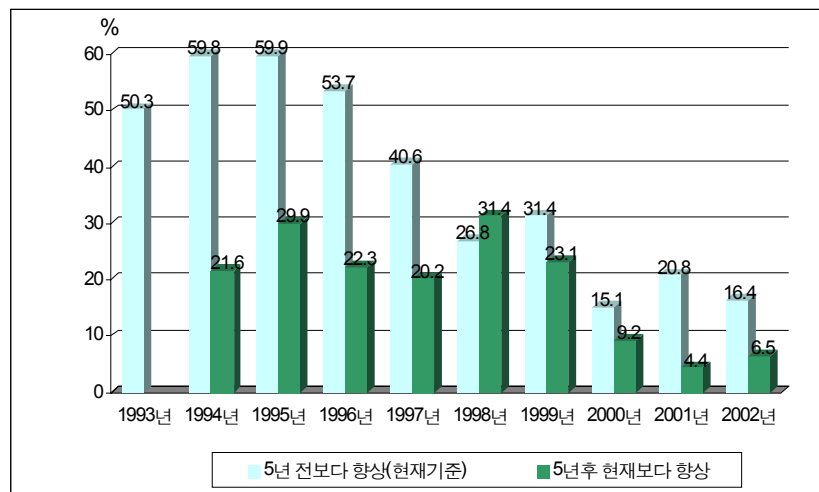
### 2.3. 농촌생활 수준 인식에 대한 변화 경향

-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인식변화를 현재시점 기준으로 5년전과 비교한 평가 및 5년후 기대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현재의 농촌생활 수준이 5년전과 비교해 나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농업인은 UR협상 타결 직후인 '94년 59.8%에서 IMF 체제 직전인 '97년까지 40~50%대를 유지했으나, '98년 IMF 이후 20%대로 떨어진 후 2002년에는 16.4%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농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농촌경제가 악화되면서 5년 전과 비교해

농업인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2-4)

- 특히, 최근 수년간 농산물 판매가격보다 생필품 구입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서 농가교역조건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에 따른 농가경제의 악화가 농촌생활 수준에 대한 평가를 낮게 하는 요인으로 추정된다.

그림 2-4. 5년 전과 5년 후 농촌생활수준 평가와 기대 변화



- 또, 농업인들은 앞으로 5년 후 농촌생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고, 특히 이같은 경향은 '99년 이전까지는

7. 「농협조사월보 2002.12」에 따르면, '95년 100을 기준으로 산정한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2002년 11월 현재 123.3인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52.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지수'는 '95년 100에서 매년 낮아져 2002년 11월 현재 81로 악화되었다.

‘현재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이 20%대를 유지했으나, 2000년 들어 이같은 기대감은 크게 낮아져 10%를 밑돌기 시작해 2002년에는 6.5%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반응은 무엇보다 쌀산업 여건변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 2.4.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부문별 인식

- 이같은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수준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향상된 항목으로는 전체 응답자중 35.2%가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꼽아 가장 높게 평가했는데, 이에 대한 응답률도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다음으로 향상된 부분은 ‘농사방법과 기술 등 영농편의’(25.0%)를 꼽았고, ‘문화·복지시설’도 14.4%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영농규모화’ 2.9%, ‘교육환경’ 2.7%, ‘농가의 자금사정’ 2.5%, ‘자녀교육’ 2.0%, ‘농민의 농업애착’ 1.4%, ‘농업의 중요성’과 ‘소득향상’ 각 1.2%로 교육과 농업인식, 자금사정 등이 비교적 미진한 부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 특히, ‘농민의 농업애착’이나 ‘농업의 중요성’과 같은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각 1.4%, 1.2%로 낮은 응답률을 보여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 강화 등 농업의 대외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농업인 자신의 농업에 대한 가치 인식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은 농촌의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농사기술 전파와 문화복지 시설 확충 등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육환경과 자녀교육 문제, 농가의 자금사정에는 진전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업 가치 인식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같은 경향은 최근 수년내 큰 변화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6. 5년전 비교 농촌생활에 있어서 향상된 항목(복수응답)

단위 : 명, %

구 분	응답 합계	응답 1	응답 2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	545(35.2)	236(29.5)	309(40.8)
농사방법과 기술 등 영농편의	397(25.0)	347(43.4)	50( 6.6)
문화복지시설	224(14.4)	127(15.9)	97(12.8)
농산물 유통	40( 2.6)	10( 1.3)	30( 4.0)
교육환경	41( 2.7)	4( 0.5)	37( 4.9)
자녀교육	31( 2.0)	10( 1.3)	21( 2.8)
농업의 중요성	18( 1.2)	4( 0.5)	14( 1.8)
소득향상	19( 1.2)	7( 0.9)	12( 1.6)
농민의 농업애착	21( 1.4)	4( 0.5)	17( 2.2)
농가의 자금사정	38( 2.5)	9( 1.1)	29( 3.8)
영농(농지)규모화	44( 2.9)	13( 1.6)	31( 4.1)
기타*	138( 9.0)	28( 3.4)	110(14.6)
합 계	1,556(100.0)	799(100.0)	757(100.0)

주: 기타 항목은 『공동생활문화』, 『이웃간 대화』, 『농외소득기회』 등 응답자수가 적은 11개 항목을 합산한 것임.

- 한편, 2002년 농촌생활을 5년전과 비교해 나빠졌다고 느끼는 응답자에게 어느 부문이 나빠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복수 응답제한 결과, ‘농산물 가격’(14.5%)을 가장 많이 꼽았으나, 그 비율은 전년에 비해 6.5%p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농가부채·영농자금’(12.6%)은 응답 비율이 전년에 비해 4.0%p 높아졌다.(표 2-7)

- 다음으로, ‘농촌일손’이라는 응답이 11.9%로 역시 전년보다 3.5%p 증가했고,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응답도 9.8%로 3.4%p 증가했으며, ‘정부의 농업인식’과 ‘농민의 농업애착’이라는 응답도 각 8.9%, 7.4%로 전년보다 증가해 전반적으로 매년 나빠진 것으로 인식하는 항목들의 응답률이 증가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반면, 2001년 세 번째 순위를 기록했던 ‘농사 수익성’은 8.8%의 응답률로 6번째 순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7.1%의 응답률을 보였던 ‘소득 향상’ 항목도 4.6%로 낮아져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7. 5년전 비교 농촌생활에 있어서 나빠진 항목(복수응답)

단위 : 명, %

구 분	2002년	2001년
농가부채영농자금	212(12.6)	136( 8.6)
농촌일손	200(11.9)	133( 8.4)
농산물 가격	244(14.5)	331(21.0)
농산물 수입개방	164( 9.8)	101( 6.4)
농사 수익성	148( 8.8)	168(10.6)
농가 자금사정	80(4.8)	125( 7.9)
정부의 농업인식	149( 8.9)	94( 6.0)
농외소득기회	31( 1.9)	52( 3.3)
소득향상	76( 4.6)	112( 7.1)
농자재 수급 및 가격	21( 1.3)	20( 1.3)
농민의 농업애착	125( 7.4)	60( 3.8)
*기타	230(13.5)	244(15.5)
합 계	1,680(100.0)	1,576(100.0)

주: 기타항목은 「자녀교육」, 「교육환경」, 「이웃간 대화」, 「일반국민의 농업의식」 등 응답자 수가 적은 11개 항목을 합산한 것임.



-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5년 전과 비교해 좋고 나쁨을 평가하게 한 결과는 (표 2-8)과 같다. 이 문항에서는 5년 전에 비해 ‘매우 좋아짐’은 5점, ‘좋아짐’은 4점, ‘보통’이면 3점, ‘나빠짐’은 2점, ‘매우 나빠짐’은 1점을 주어 가중평균을 내었다.

표 2-8. 5년전 비교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

단위 : %

구 분	매우좋아짐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나빠짐	평균(점)
농사방법과 기술	37.2	48.6	13.3	1.0	0.0	4.2
문화복지시설	16.5	50.3	27.6	4.3	1.3	3.8
소득 향상	2.9	13.5	40.0	28.1	15.6	2.6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	31.3	47.9	16.7	3.0	1.2	4.1
교육환경	6.7	33.3	36.4	14.9	8.6	3.1
농가 자금사정	3.8	15.7	29.6	32.5	18.4	2.5
농산물 가격	1.2	5.8	23.4	42.5	27.1	2.1
농촌일손	0.1	3.1	15.7	41.6	39.5	1.8
자녀교육	1.5	13.7	31.9	32.1	20.8	2.8
농외소득기회	3.3	31.3	44.9	15.8	4.8	2.4
영농(농지)규모	2.4	26.8	42.6	19.1	9.1	3.1
농산물 유통	1.4	7.6	22.7	39.7	28.6	2.9
농사 수익성	1.2	11.7	22.9	34.5	29.7	2.1
농가부채 영농자금	3.5	12.3	24.8	28.5	30.9	2.2
농업의 중요성	2.5	26.8	37.3	23.8	9.6	2.3
공동생활문화	3.0	22.6	40.4	23.6	10.4	2.9
이웃간 대화	1.1	6.4	17.5	38.6	36.5	2.8
정부의 농업인식	1.2	7.5	21.7	42.0	27.6	2.0
일반국민의 농업인식	2.1	7.5	23.2	41.8	25.3	2.1
농산물수입개방	0.6	2.9	13.5	40.2	42.8	1.8
농자재수급 및 가격	1.3	11.9	34.8	33.0	19.1	2.4
농민의 농업애착	1.6	7.6	22.3	33.3	35.2	2.1

- 그 결과 ‘농사방법과 기술’(4.2점), ‘도로교통 등 생활환경’(4.1점), ‘문화복지시설’(3.8점), ‘교육환경’(3.1점), ‘영농규모 확대’(3.1점) 등이 비교적 좋아진 것으로 꼽았으며, 이밖에 ‘농산물 유통’(2.9점),

‘공동생활문화’(2.9점), ‘자녀교육’(2.8점), ‘이웃간 대화’(2.8점) 등은 보통으로 조사된 반면, ‘농산물 수입개방’, ‘농촌일손’, ‘농산물 가격’, ‘정부의 농업인식’ 등은 평균 2.0점대에 머물러 5년전보다 나빠진 항목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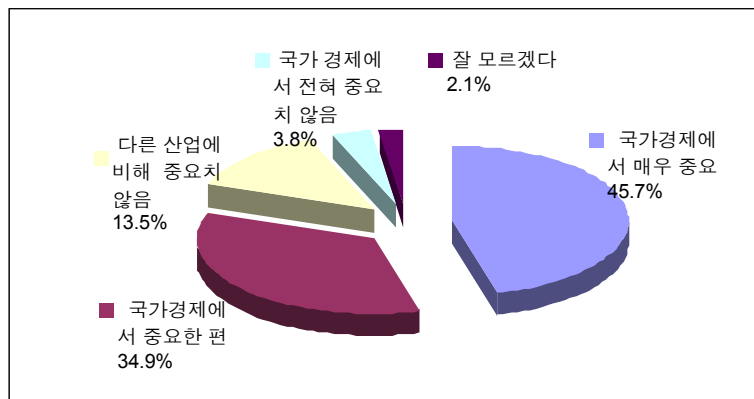
## 2.5. 농업에 대한 중요도 및 농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

-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응답자 절반정도 (45.7%)는 ‘농업이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편’(34.9%)이라는 응답을 포함하면 농업인 10명중 8명(80.6%)은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가치 인식이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다른 산업에 비해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의 비율은 전년도 보다 4.1%p 낮아진 13.5%였으며, ‘국가경제에서 전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은 3.8%로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그림 2-5)
- 전반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농업이 여전히 국가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농산물 시장개방 등과 맞물려 이같은 인식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또, 이같은 결과는 '9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도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연구<sup>8</sup>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도시민

8. 박대식·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7.5%는 ‘농업은 국가경제에서 근본이 되는 산업’이라는 응답결과가 제시된 바 있으며, ‘농사가 잘못되면 국가경제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질문에도 74.3%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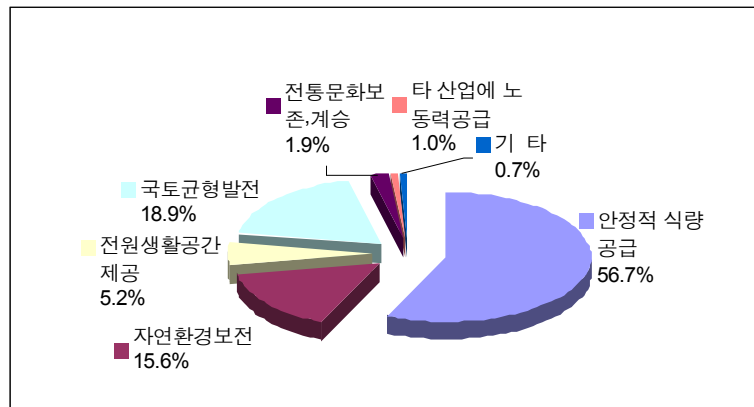
그림 2-5.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견해



- 농업인들에게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는, ‘안정적 식량공급’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농업인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7%를 차지해 농업의 식량안보 측면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6)
- 다음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18.9%), ‘자연환경 보전’(15.6%)으로 나타났고, 반면, ‘전원생활 공간 제공’(5.2%), ‘전통문화 보존·계승’(1.9%)등 농촌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은 낮았고, ‘타 산업에 노동력 공급’도 농촌인구의 절대적인 감소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낮은 응답률(1.0%)을 기록하였다.

- 농사경력별 계층간에도 이같은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전원생활 공간 제공'에 대한 가치 인식은 농사경력 20년 미만 계층(9.1%)이 20년 이상 계층(4.7%)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 이와 같은 미래의 농업·농촌에 대한 가치 인식은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선행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으며, 대체적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중 식량안보와 국토의 균형발전, 자연환경보전 기능에 대한 가치 인식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향후 농업·농촌에 대한 역할



- 특히, 농업의 식량안보 기능(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미래의 가치 인식은 최근들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비율은 '94년(김중숙, 민상기) 16.9%, '97년(농민신문 조사) 37.4%, '99년(박대식, 김정호) 61.3% 등으로 나타나 매년 중요도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

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도 56.7%의 비중을 보임으로써 도시 인이나 농촌주민들 모두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농업·농촌의 중요한 역할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9)</sup>.

### 3. 농사 만족도 및 농촌거주에 대한 인식

- 농업인들이 직업으로써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 및 직업관과 생활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3.1. 농업인들의 농사 만족도

-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응답자는 ‘99년 21.4%에서 2000년에는 12.6%로 절반가량 낮아졌다가 2001년에는 다시 9.9%로 떨어진 뒤 2002년에는 이보다 더 낮아진 7.6%를 보여 농업인들의 농사만족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불만족하다(매우 불만 포함)’는 응답자는 ‘99년 30.2%에서 2000년에는 48.6%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다시 54.4%로, 2002년에는 57.0%로 증가해 농업인 절반 이상이 농사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고

---

9.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결과는 각 조사연구의 방법상 차이로 말미암아 백분율의 절대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며, 다만 비교는 강조점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 유의해야 한다.

응답한 농업인은 35.4%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표 2-9)

- 농업종사 만족도를 농사경력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구분해 두 계층간 경향을 비교해 본 결과,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응답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 6.7%에 그친 반면, 20년 미만 경력을 가진 농업인은 14.7%로 2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농업인의 농사만족도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본 조사와 유사한 시기<sup>10)</sup>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인 60명을 대상으로 현지 면접조사한 결과에서는 직업으로써 농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21.7%, ‘불만이다(매우불만 포함)’ 51.6%로 농업인의 만족도가 본 조사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 조사 방법과 표본 구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9. 농업 종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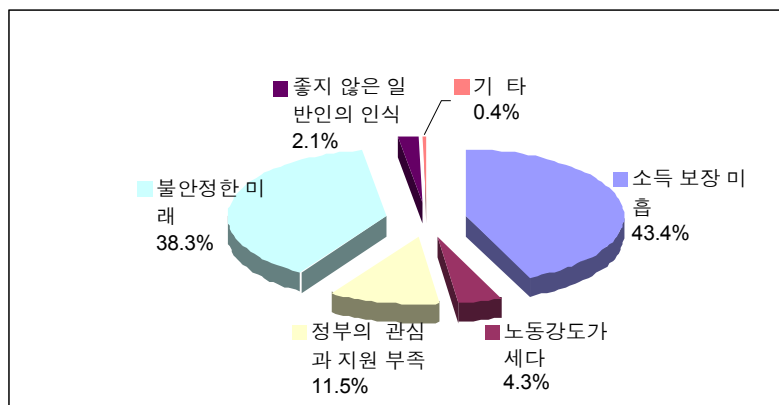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농사 경력별		전체
	20년 미만	20년 이상	
매우 만족한다	2.3	1.1	10( 1.2)
대체로 만족한다	12.4	5.6	54( 6.4)
그저 그렇다	24.7	36.6	300(35.4)
약간 불만이다	32.6	28.1	243(28.6)
매우 불만이다	28.1	28.6	241(28.4)
응답자수	89	759	848(100.0)

10.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관련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 조사, 2002년 10월

-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요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소득보장 미흡’이라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노력에 비해 보수가 타분야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불안정한 미래’ 즉,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장래가 불안하다는 응답이 38.3%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타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11.5%로 집계돼 정부의 농업지원 정책에도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밖에 농사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노동강도가 세다’(4.3%), ‘농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좋지 않다’(2.1%) 등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농업인들의 농사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소득보장 미흡,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한 장래 불안,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 노동강도, 농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등인 것으로 집계되었다.(그림 2-7)

그림 2-7. 농업 종사 만족도 저하 요인



- 농업인들의 농업 종사 만족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94년부터 '96년까지 10%대에 머물던 농업종사 만족도가 '97년 이후 20%대로 상승해 '99년까지는 이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0년에 10%대로 (12.6%) 떨어진 후 2001년에는 9.9%로, 2002년에는 다시 7.6%로 떨어짐으로써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표 2-10)
-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농업인 ('매우 불만이다')의 비율이 '98년 IMF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98년 6.8%에서 2000년 19.9%, 2002년 28.5%를 기록함으로써 만족도 감소와 함께 불만족이 심화 또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0. 농업 종사 만족도 연도별 변화 추이

단위 : 명, ( )는 %

구분/년도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매우 만족	10( 1.2)	1.6	1.4	3.2	4.0	3.4	1.7	1.7	1.1
대체로 만족	55( 6.4)	8.3	11.2	18.2	25.1	18.0	10.8	8.6	13.7
만족 소계	65( 7.6)	9.9	12.6	21.4	19.1	21.4	12.5	10.3	14.8
그저 그렇다	302(35.4)	35.7	38.8	48.3	43.4	43.1	48.4	48.3	44.2
불만이다	243(28.5)	29.4	28.7	21.1	20.7	24.7	26.0	27.3	41.0
매우 불만*	243(28.5)	25.0	19.9	9.1	6.8	10.9	13.1	14.2	
합 계	853(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95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시 신설항목.

- 이처럼 농업종사 만족도가(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포함) 최근 10년새 최저치를 기록하며 '93년 UR협상 타결 시점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된 것은 2002년 쌀값 하락 등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



락과 한-칠레 FTA협상 타결, DDA 농업협상 진전 등 농업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반응으로 분석된다.

### 3.2. 농촌 계속거주 및 이농 의향

- 앞으로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느냐는 질문에는 2000년 80.4%의 응답자가 ‘농촌에 계속살겠다’고 답한 반면, 2001년에는 70.0%로 10.4%p 낮아졌고, 2002년에는 다시 약간 상승해 77.5%의 응답자가 농촌 계속 거주 의사를 밝혔다.
- ‘농촌을 떠나겠다(떠났다 돈벌어 돌아오겠다 포함)’는 의사를 가진 농업인은 예년과 비슷한 11.5%를 기록했고, 이밖에 11.1%는 농촌을 떠날런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2-11)

표 2-11. 농촌 계속 거주 여부

단위 : 명, %

구 분	농사 경력별		전체
	20년 미만	20년 이상	
계속 살려고 함	65.6	78.8	663(77.5)
농촌 떠날 예정	17.8	9.4	88(10.3)
떠났다 돈벌어 돌아 오겠음	1.1	1.2	10( 1.2)
모르겠음	15.5	10.6	95(11.1)
응답자수	90	766	856(100.0)

- 이를 농사 경력별로 살펴보면, ‘농촌을 떠나겠다’는 비율은 경력별 차이가 없었으나,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농업인은 경력 20년 이상이 20년 미만보다 13.2%p 높게 나타났고, ‘모르겠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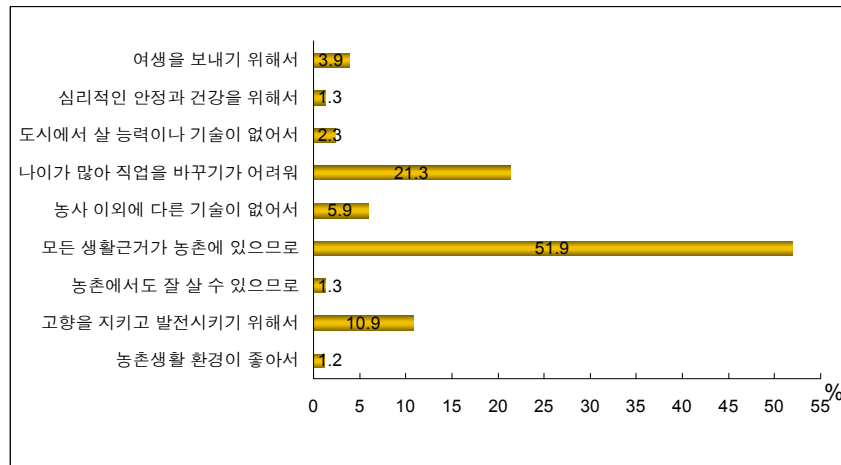
결정을 유보한 농업인은 20년 미만(15.5%) 20년 이상(10.6%)보다 4.9%p 정도 높게 나와 농사 경력이 짧을 수록 이농을 고려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응답자의 농촌 계속 거주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을 상회하는 51.9%가 ‘모든 생활근거가 농촌에 있으므로’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나이가 많아 직업을 바꾸기가 어려워’라는 응답이 21.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그림 2-8)
- 이밖에 ‘농사 이외에 다른 기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9%, ‘도시에서 살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2.3%로 나타나 상당수의 농업인이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이유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의 재촌 의사는 도시에서 살고싶지 않다는 의사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중 상당수는 여건에 따라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이농층이라고 할 수 있겠다.<sup>11</sup>
- 하지만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는 응답자가 10.9%,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 3.9%,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으므로’ 1.3%, ‘농촌생활 환경이 좋아서’ 1.2% 등 일부 농업인들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촌을 고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11 박대식, 김정호의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1999.에서는 ‘장래에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가진 농업인이 26.9%로 조사되었다.

그림 2-8. 농촌 거주 이유



- 이농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농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앞으로 3년 이내에 이농하겠다는 응답자가 40.2%로 전년보다 5.6%p 증가하였고, 반면 5년 이내에 농촌을 떠나겠다는 응답은 2001년 25.5%에서 2002년 18.2%로 7.3%p나 줄어 이농을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농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2-12)
- 농촌을 떠날 의향을 갖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도 아직 이농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농업인이 29.9%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개방 속도나 농업의 여건 변화 등이 이들을 계속 농업에 종사하게 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같은 결과를 농사 경력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이농 의사를 갖고 있는 농업인중 농사 경력이 20년 미만인 농업인 절반 가까이

(42.9%)가 3년 이내에 이농할 것으로 나타났고, 20년 이상 경력자는 39.7%가 3년 이내에 이농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20년 미만의 경력자 42.9%와 20년 이상의 경력자 65.1%가 5년 이내 이농할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이 사항은,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계층이 20년 미만에서 42.8%로 나타난 반면, 20년 이상에서는 27.0%로 나타나 비교적 농사 경력이 짧은 농업인 층에서 향후 농업 여건에 따라 가변적인 입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2. 이농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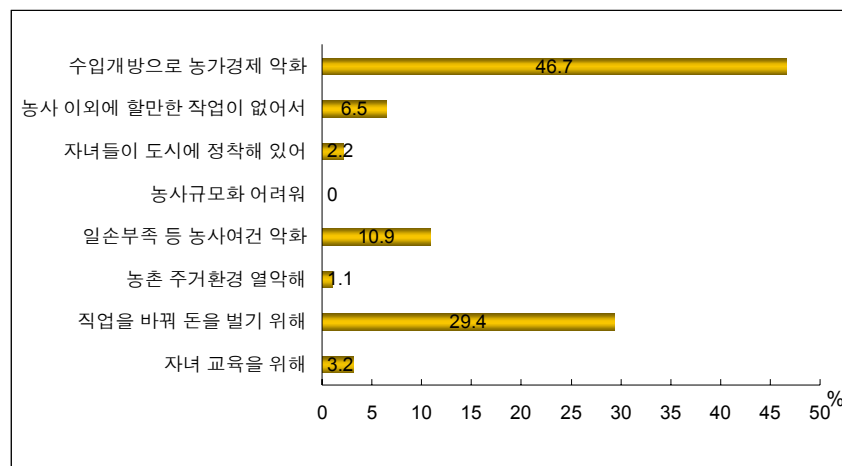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 분	농사 경력별		전체
	20년 미만	20년 이상	
1년 이내	0.0	3.2	2( 2.6)
3년 이내	42.9	39.7	31(40.2)
5년 이내	0.0	22.2	14(18.2)
10년 이내	14.3	7.9	7( 9.1)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42.8	27.0	23(29.9)
응답자수	14	63	77(100.0)

- 전체 응답자중 이농을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떠났다 돈벌어 돌아오겠음 포함)은 11.5%였는데, 이들의 이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수입개방으로 농가경제 악화’란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아 농업인들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2-9)

- 그 외에 ‘직업을 바꿔 돈을 벌기 위해’라고 답한 응답자도 29.4%에 달했으며, ‘일손 부족 등 농사여건 악화’로 이농하겠다는 응답자도 10.9%에 달하였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해’ 이농하겠다는 응답자는 3.2%로 조사되었다.

그림 2-9. 농촌을 떠나는 이유



### 3.3. 농업 승계 의향

- 자녀들에게 농업을 대물림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전년과 비슷한 2.4%에 그친 반면, ‘다른 직업을 권장하겠다’는 응답은 41.4%로 2000년(35.1%)보다 높아져 자녀에 대해 농사를 대물림 하겠다는 농업인이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13)
- 이밖에, 절반에 가까운 48.9%는 여전히 ‘자녀의 뜻대로 직업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많은 농업인이 자녀들의 재능이나 의사

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이같은 결과를 주소득 작목 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농업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농가는 과수농가에서 가장 높게 나왔고, ‘다른직업을 권장하겠다’는 농가는 시설원에 재배농가가, ‘자녀의 뜻대로 하겠다’는 개방적인 의사는 노지채소 농가 계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였으나 이같은 경향은 계층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13. 자녀들에 대한 농업 승계 의향

단위 : 명,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전체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농업 적극 권장	1.2	6.7	0.0	4.4	2.6	1.7	0.0	20( 2.4)
다른직업 권장	40.6	33.6	36.3	45.1	55.1	43.9	38.5	344(41.4)
자녀의 뜻대로	49.6	53.0	56.4	46.1	35.9	49.1	53.8	407(48.9)
상황에따라결정	8.6	6.7	7.3	4.4	6.4	5.3	7.7	61( 7.3)
응답자수	419	119	55	91	78	57	13	832(100.0)

-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99년 도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도시민에게 자식이 원하면 농업에 종사하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반대 입장을 보인 비율은 22.7%에 그쳤으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 비율은 63.1%에 달해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현실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12</sup>.

12. 「농업·농촌의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199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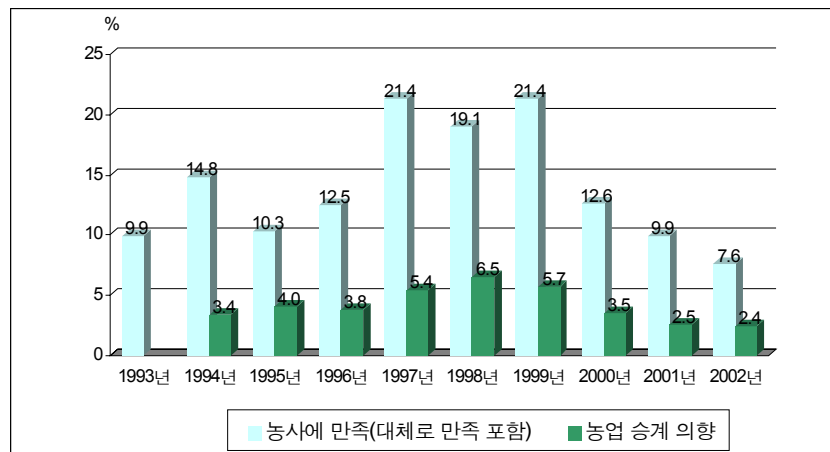
### 3.4. 농사 만족도와 영농승계 의향 변화 추이

- 이번 조사에서 농업인들의 농사 만족도는 '93년 UR협상 타결 이후 이후 등락을 거듭하며 대체적으로는 '99년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0년 들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001년에는 9.9%로 낮아진 이후 다시 2002년에는 7.6%로 떨어져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업종사 만족도는 UR협상 타결로 농업의 장래성이 불투명해진 '93년 9.9%로 출발, '92년부터 '98년까지 7년간 42조원이 투입된 1차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경영의 규모화·전문화 진전 등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고, 정체상태에 있던 농업성장률이 빠른 성장세로 회복되면서 점차 높아져 '99년까지 대체적으로 상승곡선을 나타내었다.(그림 2-10)
- 그러나 IMF관리 체제 이후 다시 하락해 2000년에는 농업종사 만족도가 10%대(12.6%)를 기록하였고, 2001년에 이어 2002년에는 급기야 한자리수를 기록함으로써 UR협상 타결 이후 최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IMF 이후 도-농간 농가간 소득격차 심화<sup>13</sup>와 농업개방 압력 강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

13. 농경연이 발표한 '농업전망 2003'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전체 농민 중 5분위(상위 20%) 계층의 연평균소득(4천829만5천원)을 1분위(하위 20% 미만) 연평균소득(607만8천원)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이 7.94로 나와, 지난 97년의 5.5에 비해 44% 가량 높아져 농가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처럼 전반적인 농가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민들 사이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된 것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고령·영세 농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10. 농사 만족도와 농업 승계 의향 변화



- 자녀에 대한 농업승계 의향도 지난 수년간 5% 내외에서 완만하게 유지됐으나, 2002년에는 2.4%로 최근 8년새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 농사 만족도와 자녀에 대한 농업권장 여부는 대체적으로 상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농업 승계 의향이 연도별로 큰 편차없이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농사만족도는 해마다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Ⅲ.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 1. 농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요구

- 농업인들이 지난 5년간 추진된 ‘국민의 정부 농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민의 정부가 역점 추진한 정책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도 실시하였다. 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시된 조사<sup>14</sup>인 점을 감안해 새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할 농정현안 대책과, 집권기간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 보았다.

##### 1.1. ‘국민의 정부’ 농정 5년 평가

- ‘국민의 정부’가 지난 5년간 추진한 농정에 대해 농업인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매우 잘했다’ 0.8%, ‘대체로 잘했다’ 5.8%로 잘했다

---

14. 이 조사는 2002년 11.20일부터 2002년 12.14일까지 실시된 조사로 대통령 선거 직전(12.19일)에 마감되었으며, 따라서 응답자가 차기정부의 실체를 알지 못한상태에서 응답하였음을 밝혀둔다.

고 평가한 응답 비율이 6.6%에 그쳤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3%로 집계돼 10명중 3명 정도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로 잘 못했다’ 39.7%, ‘매우 잘 못했다’ 26.4%로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6.1%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표 3-1)

-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잘했다(매우 잘했다 포함)’는 평가가 60세 미만보다 60세 이상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매우 잘 못했다’는 평가는 50세 미만에서 40.2%, 50대 31.5%, 60대 18.1%, 70세 이상에서 13.1%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 수록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표 3-1. ‘국민의 정부’ 농정 5년 평가

단위 : 명, %

구 분	연 령 별				전체
	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매우잘했다	0.5	0.4	1.2	1.2	7( 0.8)
대체로 잘했다	2.0	4.2	6.8	15.5	49(5.8)
보통이다	19.1	23.6	32.8	34.5	230(27.3)
대체로잘못했다	38.2	40.3	41.1	35.7	334(39.7)
매우잘못했다	40.2	31.5	18.1	13.1	222(26.4)
응답자수	204	216	338	84	842(100.0)

## 1.2. 국민의 정부 농업정책 분야별 평가

- 이 문항은 ‘국민의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11개의 주요 농업정책

에 대해 ‘매우 좋아짐’과 ‘매우 나빠짐’까지 5개 평가단계에 5점부터 1점을 기입하게 하여 가중 평균치를 구해 분석하였다.(표 3-2)

-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농업정책중 평균 3점을 상회한 정책은 유일하게 ‘농가부채 및 연대보증 해소 노력’(3.2점)을 꼽았으며, 나머지 10개 항목은 모두 3점 미만의 점수를 기록해 보통 이하의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농정조직개편과 제도개선’,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이 각 2.9점으로 부채대책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소득 안정망 구축’(2.8점), ‘유통구조개혁’과 ‘정보화 격차해소’가 각 2.7점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농촌복지대책’(2.6점), ‘수출농업 육성’(2.5점) 순으로 집계되었다.
- 반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2.1점), ‘농업협상에 적극적인 대응’(2.2점), ‘벼농사 구조조정과 쌀값 안정’(2.3점) 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 이와같은 조사결과는 앞서 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과 불만 사항으로 제시된 결과와 대부분 일치되는 것으로, 농업인들은 국민의 정부가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등 농가부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던 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제도마련 및 지원책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 국민의 정부가 정권초기 단행한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과, 물관련 조직을 통합해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한 것 등 농정관련 조직 개혁을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하였다.

- 특히,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가 「농어업인부채 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총 17조5천5백억원 규모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부채 문제 해결 노력이 농업인들에게 어느정도 만족감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 이에 비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과 국민의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농산물 유통개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중 마늘 협상 파문, 한-칠레 FTA협상 타결 등으로 국제농업협상에 대한 대응도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돌출되기 시작한 쌀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 등으로 벼농사 구조조정과 쌀값안정대책도 부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농정 시책 부문별 평가

단위 : %

구 분	매우좋아짐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나빠짐	평균(점)
농정조직개편과 제도 개선	5.9	19.9	44.7	18.7	10.8	2.9
농가부채 및 연대보증해소노력	14.3	29.0	28.2	16.2	12.4	3.2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	4.8	16.5	49.0	23.2	6.6	2.9
유통구조 개혁	3.9	15.5	42.0	26.6	12.0	2.7
수출농업 육성	4.6	12.6	34.1	30.1	18.6	2.5
농업협상에적극적인대응	6.7	10.0	14.1	30.3	39.0	2.2
농산물수급및가격안정	3.1	6.3	21.5	38.6	30.4	2.1
소득안정망 구축	6.8	19.2	36.9	24.5	12.6	2.8
벼농사구조조정과쌀값안정	3.8	8.0	25.5	35.2	27.5	2.3
정보화격차해소	4.1	17.2	40.1	25.8	12.9	2.7
농촌복지대책	4.5	14.5	36.1	27.5	17.4	2.6

### 1.3. 새정부의 최우선적인 농정현안 과제

- 이 조사가 실시된 직후 대통령선거가 있음을 의식해 농업인들은 새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농정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농가부채 해결방안 제시’(30.0%)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농가소득보전 확대’(26.8%), ‘쌀 가격 및 수급안정대책’(15.8%)을 들었다.(표 3-3)
- 이같은 반응을 연령 계층별로 분석한 결과, ‘농가부채 해결방안 제시’가 시급하다는 의견은 60세 미만 계층에서 높게 나왔고, ‘농가 소득보전확대’는 50세 미만 계층에서, ‘쌀 가격 및 수급안정대책’은 60세 이상 농가 계층에서, ‘쌀채협상 기본전략 마련’은 60세 이상 계층에서 비교적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 이처럼 연령층이 낮을 수록 농가부채 해결과 소득보전 요구가 강한 것은 50세 이하 농가의 농가부채 규모가 60세 이상 농가의 농가부채 규모보다 배 이상 크고, 소득대비 부채 비율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sup>15)</sup>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1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농업전망 2003’ 자료에 따르면, 농가부채규모에 있어서 50세 이하 농가의 부채규모는 3,700만원 이상으로 농가소득의 140% 수준에 이르고 있어 농가부채문제가 중요한 문제인 반면, 60세 이상 농가의 부채규모는 1,055만원 수준으로 소득대비 부채규모의 비율도 55% 수준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부채문제의 심각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새정부의 최우선 농정 현안 과제

단위 : 명, %

구 분	연 령 별				전체
	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쌀재협상 기본전략	6.9	9.8	19.3	12.6	112(13.2)
WTO및FTA농업협상기본전략	12.3	12.5	15.8	11.5	116(13.7)
농가부채 해결 방안 제시	36.5	39.5	21.0	26.4	254(30.0)
농가소득보전 확대	37.4	22.8	22.8	27.6	227(26.8)
쌀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6.4	14.9	20.8	20.7	134(15.8)
기 타	0.5	0.5	0.3	1.2	4( 0.5)
응답자수	203	215	342	87	847(100.0)

#### 1.4. 새정부가 임기중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 농업인들은 새정부가 집권기간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으로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29.8%)을 꼽았다. 다음으로 ‘강력한 농업 구조조정’(13.8%), ‘유통개혁’(12.3%), ‘농외소득 창출지원’(10.3%)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3-4)
- 이밖에, ‘농촌생활 개선 및 복지대책 강화’(8.9%), ‘수출농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8.3%), ‘투융자 확대’(7.4%), ‘친환경농업 육성’(5.0%),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벤처농업 활성화’(3.8%) 순으로 집계되었다.
-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업인들은 새정부 출범 이후 FTA 체결 확대와 DDA 농업협상, 2004년 쌀 재협상 등 국제협상 일정

을 감안해 농업의 개방폭을 결정하게 될 국제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인 스스로도 강력한 농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4. 새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농업정책 (복수응답)

단위 : 명, %

구 분	응답 합계	응답 1	응답 2
강력한 농업 구조조정	237(13.8)	227(26.4)	10( 1.2)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	514(29.8)	425(49.4)	89(10.3)
투융자 확대	127( 7.4)	48( 5.6)	79( 9.2)
유통 개혁	212(12.3)	79( 9.2)	133(15.5)
친환경농업 육성	85( 5.0)	20( 2.3)	65( 7.6)
수출농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	143( 8.3)	22( 2.5)	121(14.1)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벤처농업활성화	65( 3.8)	12( 1.4)	53( 6.2)
농외소득창출지원	177(10.3)	19( 2.2)	158(18.4)
농촌생활 개선 및 복지대책 강화	152( 8.9)	7( 0.8)	145(16.9)
*기타	7( 0.4)	2( 0.2)	5( 0.6)
합 계	1,719(100.0)	861(100.0)	858(100.0)

## 2. 쌀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인식

- 2004년 쌀개방 재협상, 쌀재고량 증가와 가격 하락 등 쌀산업 여건 변화와 관련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조정제 도입 등 감산정책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벼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농업인들의 견해는 어떠한 지 살펴보았다.

### 2.1. 정부의 쌀 감산정책에 대한 견해

- 정부가 쌀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조정제 도입 등 감산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적극적인 감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9.4%로 나타난 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표 3-5)
- 이밖에, ‘적정 생산량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23.3%에 달했고, ‘일시적인 과잉생산 이므로 소비촉진 등 재고 해소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19.1%로 집계되었다.

표 3-5. 쌀 감산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영농 규모						전체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적극적인 감산정책실시	13.3	10.6	8.7	8.0	8.0	10.8	80( 9.4)
현재의 생산량 유지	35.5	52.3	44.3	44.0	49.0	41.3	385(45.5)
적정생산량 규모의 합의	26.7	17.9	23.8	22.7	26.2	24.5	197(23.3)
소비촉진책 우선 추진	17.8	15.2	20.5	23.3	14.8	21.6	162(19.1)
잘 모르겠다	6.7	4.0	2.7	2.0	2.0	1.8	23( 2.7)
응답자수	45	151	185	150	149	167	847(100.0)

- 이같은 결과를 영농규모별 계층간에 비교해 보면, 감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0.5ha 미만의 농가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고,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0.5ha~1ha 농가에서 높게 나왔으나 전체적으로 계층간에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과적으로 정부의 쌀 감산정책에 찬성하는 농업인은 10명중 1명(9.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은 성급한 감산정책 보다는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거나 적정생산량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 쌀 생산조정제 가입 의사

- 2003년부터 도입키로 한 쌀 생산조정제<sup>16</sup>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51.8%,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8.2%로 조사돼 가입할 의사가 있는 농가 비율이 약간 높게 나왔다.
- 경작규모별 계층간에도 이같은 의향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다만 2~3ha 농가 계층에서 ‘가입하겠다’(49.3%)는 의사보다는 ‘가입하지 않겠다’(50.7%)는 의사가 약간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1.5ha~2ha 농가계층은 ‘가입하지 않겠다’(45.9%)는 응답보다 ‘가입하겠다’(54.1%)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6)
- 조사시점에서는 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나오

---

16. 쌀 생산조정제는 전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된 것으로, 이후 시행방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의사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생산조정제 시행 방안이 확정된 후 2003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생산조정제 참여의향 조사결과<sup>17</sup>에서는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13.5%,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86.5%로 나타나 본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6. 쌀 생산조정제 가입 의사

단위 : 명, %

구 분	경작규모						전체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가입하겠다	52.4	52.1	51.9	54.1	49.3	51.2	427(51.8)
가입하지 않겠다	47.6	47.9	48.1	45.9	50.7	48.8	398(48.2)
응답자수	42	144	181	148	146	164	825(100.0)

### 2.3. 향후 벼 재배면적 조정 의향

-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과 2004년 쌀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해 농업인들에게 벼 재배면적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현재의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50.8%로 조사되었고, ‘점차 줄이겠다’는 응답이 20.4%, ‘개방속도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25.3%로 나타났으며, ‘점차 확대하겠다’는 농업인은 3.5%에 불과하였다.(표 3-7)

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1월8일~10일 950농가 전화조사

- 이를 경작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점차 줄이겠다’는 응답 비율은 0.5ha~2ha 규모의 농가계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고, 반면, ‘점차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3ha 이상의 농가가 뚜렷하게 높게 나오는 등 규모가 클 수록 재배면적을 확대하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쌀산업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쌀 재배면적을 감축할 의향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조사한 2003년 벼 재배의향면적 조사에서도 전년 재배면적 대비 0.3%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결과와 유사한 현상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3’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논농업직불제 단가인상, 소득보전직불제 시행, 2002년산 수확기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sup>18</sup>.
- 이같은 경향은 2001년 차기년도 쌀 재배면적 조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도<sup>19</sup> 71.7%가 ‘현수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4.0%, 그쳤던 결과와 비교해도 농업인들의 쌀농사에 대한 애착과 소득작목으로써의 가치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쌀 재고 증가와 가격하락, 쌀 개방 제협상 등으로 1년새 ‘현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20.9%p나 감소한 결과를 보여 향후 비교적 규모가 작은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 감소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18. 「쌀수급 동향과 전망」 2003, 김명환·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 「2001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김동원·조태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표 3-7. 쌀 재배면적 조정 의향

단위 : 명, %

구 분	경작규모						전체
	0.5ha 미만	0.5~ 1ha	1~ 1.5ha	1.5~ 2ha	2~ 3ha	3ha 이상	
점차 줄임	14.3	28.2	25.0	21.8	12.8	15.6	154(20.4)
현재규모 유지	60.0	53.3	46.3	48.9	55.0	49.0	383(50.8)
점차 확대	0.0	0.0	0.6	3.7	3.6	10.2	26( 3.5)
개방속도 감안한 결정	25.7	18.5	28.1	25.6	28.6	25.2	191(25.3)
응답자수	35	135	164	133	140	147	754(100.0)

#### 2.4. 쌀소득보전직불제 시행에 대한 반응

- 농업인들에게 2002년 10월에 도입돼 신청을 마친 쌀 소득보전직불제<sup>20</sup>에 대해 이 직불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농가가 37.9%(‘큰 도움’ 4.7%, ‘약간 도움’ 33.2%)로 나타났다.(표 3-8)
- 반면,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률은 이보다 높은 44.4%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소득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도 10.9%로 나타나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였다<sup>21</sup>.

20.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2002년 10월에 도입된 직불제로 전년 수확기 쌀 가격을 기준으로 쌀 값이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80%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이며, 0.1ha 이상의 논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조수입(시장 판매수입)의 0.5%를 적립해야 하며 내년 3월에 지급된다.

- 이를 경작규모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은 비교적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별도움이 안될것’이라는 응답과 ‘오히려 소득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경작규모가 클 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어 경작규모에 따라 기대치에 큰 차이를 보였다.

표 3-8.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에 따른 반응

단위 : 명, %

구 분	경작규모						전체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큰 도움	5.0	4.9	5.7	3.5	2.1	6.9	38( 4.7)
약간 도움	57.5	42.0	34.1	27.7	32.6	23.7	267(33.2)
별도움 안됨	25.0	34.9	44.3	48.9	49.3	49.4	357(44.4)
소득불안정 초래	7.5	7.0	6.8	12.8	13.2	16.3	88(10.9)
잘 모르겠다	5.0	11.2	9.1	7.1	2.8	3.7	54( 6.7)
응답자수	40	143	176	141	144	160	804(100.0)

-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농가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보전금액이 적다’는 이유가 47.9%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다음은 ‘쌀값 하락의

21. 이 제도 시행 첫해인 2002년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가입한 농민은 전체 대상 107만명 중 17만여명이며 계약 면적은 대상면적 89만6000ha의 18% 수준인 16만1000ha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28.1%, ‘보험금을 감안할때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 21.2%로 나타났다.(표 3-9)

- 이를 경작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적은 보전금액’을 꼽은 농가는 비교적 경작규모가 큰 농가에서, ‘보험금 감안때 도움이 안된다’는 농가는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계층에서 뚜렷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다른 항목은 경작규모 계층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9.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부정적인 이유

단위 : 명, %

구 분	경작규모						전체
	0.5ha 미만	0.5~ 1ha	1~ 1.5ha	1.5~ 2ha	2~ 3ha	3ha 이상	
적은 보전금액	33.3	55.3	46.0	45.3	51.1	46.6	208(47.9)
보험금감안때도움이안됨	33.3	25.0	24.1	23.3	16.7	17.5	92(21.2)
가입절차복잡	0.0	1.8	1.2	3.5	2.2	1.9	9( 2.1)
쌀값하락의역효과	33.3	16.1	27.6	27.9	30.0	33.0	122(28.1)
기 타	0.0	1.8	1.1	0.0	0.0	1.0	3( 0.7)
응답자수	12	56	87	86	90	103	434(100.0)

- 이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당시 논란이 있었던 ‘보전금 규모’가 농업인들의 제도 가입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경작규모가 큰 농가는 ‘보전금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는 ‘보험금액’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3. 한-칠레 FTA협상에 대한 의식

- 2002년 10월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과수 농가를 비롯해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되었고, 정부는 이를 계기로 FTA 체결을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FTA 체결에 대해 농업인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 3.1. 한-칠레 FTA 협상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

- 농업인들에게 2002년 10월 한국과 칠레간에 타결된 FTA 협상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협상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다’는 농가는 12.4%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농업피해 부분은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나 대다수가 농업과 관련한 협상 내용은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협상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표 3-10)

표 3-10. 한-칠레 FTA 협상내용 인지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전체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구체적으로 안다	10.9	16.4	11.1	17.2	12.5	7.1	14.3	104(12.4)
농업 피해 부분은 안다	81.7	80.3	81.5	80.6	81.2	89.3	57.1	684(81.4)
전혀 모른다	7.4	3.3	7.4	2.2	6.3	3.6	28.6	52( 6.2)
응답자수	421	122	54	93	80	56	14	840(100.0)

- 이를 주소득작목 계층별로 살펴본 결과는, 협상내용을 구체적으

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계층은 축산농가(17.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과수농가(16.4%) 순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피해규모가 거론된 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3.2.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한 의사

-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살펴 본 결과, ‘피해보전대책이 마련돼도 농업전반에 부작용이 있으므로 체결에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39.5%인 반면,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5.5%)과 ‘피해대책 마련시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48.2%)의 입장을 가진 농업인이 과반수를 넘었다.(표 3-11)

표 3-11.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주소별 작목별							계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국익을위해어쩔수없다	7.1	2.4	5.6	3.3	5.1	3.4	7.7	46( 5.5)
피해대책마련시 찬성	44.1	52.8	41.5	53.3	58.2	53.5	46.1	404(48.2)
체결 반대	40.5	41.5	49.1	39.1	30.4	34.5	30.8	331(39.5)
잘 모르겠다	8.3	3.3	3.8	4.3	6.3	8.6	15.4	57( 6.8)
응답자수	420	123	53	92	79	58	13	838(100.0)

### 3.3. FTA 협상 전략에 대한 의견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을 비롯해 여러나라와 FTA 체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들에게 FTA 체결시



농업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 이 질문에 응답자의 83.9%가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법제화 등의 사전대책 마련 후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업강대국과는 FTA 체결을 회피해야 한다’는 의견(8.0%)과 ‘국가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7.5%)는 상반된 입장을 가진 농업인은 10% 이내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업인은 FTA 체결에 대한 세계경제 흐름을 감안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2)

표 3-12. 향후 FTA 협상전략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주소득 작목별							전체
	수도작	과수	노지채소	축산	시설원예	특작	기타	
국익을 우선시해야 대책마련 후 협상	9.1	7.3	5.5	3.3	7.5	7.0	0.0	63( 7.5)
농업강대국 FTA회피 기 타	81.8	81.3	88.9	90.0	90.0	80.7	85.7	701(83.9)
국가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8.9	10.6	5.6	5.6	1.2	10.5	14.3	67( 8.0)
응답자수	0.2	0.8	0.0	1.1	1.3	1.8	0.0	5( 0.6)
	418	123	54	90	80	57	14	836(100.0)

#### 4. 농지제도변화에 대한 농업인 의식

- 정부는 2002년 11월 52년만에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농지 소유상한을 폐지하는 등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등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와 관련해 농업인들의 농지에 대한 인식 변화와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살펴 보았다.

#### 4.1. 농지에 대한 가치인식

- 농업인에게 농지를 자산가치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생산가치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농지 가치 인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생산수단으로써의 가치’를 들었고, 37.3%의 응답자는 ‘자산으로써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산수단으로’ 농지를 인식하고 있는 농업인이 ‘자산가치’로 생각하는 농업인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3)

표 3-13. 농지에 대한 가치 인식

단위 : 명, %

구 분	경작 규모						전체
	0.5ha 미만	0.5~ 1ha	1~ 1.5ha	1.5~ 2ha	2~ 3ha	3ha 이상	
자산가치	44.2	41.8	36.4	38.8	30.7	36.9	318(37.3)
생산수단으로의 가치	44.2	51.0	57.7	56.6	67.3	60.7	494(57.9)
잘 모르겠다	11.6	7.2	5.9	4.6	2.0	2.4	41( 4.8)
응답자수	43	153	187	152	150	168	853(100.0)

- 이 조사결과를 경작규모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자산가치’로 생각하는 농업인은 경작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농가계층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생산수단’으로 인식하는 농업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경작규모가 큰 농가계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

나, 계층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4.2. 농지 소유개념에 대한 인식

- 농업인에게 농사를 그만두게 되면 소유농지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농사를 짓든 안짓든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의견이 33.8%로 가장 많았고, ‘임대 또는 영농대행 하겠다’는 응답도 31.2%로 나타나 자식에게 대물림하겠다는 의사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
- 또, ‘매각하겠다’는 응답도 22.1%에 달했으며, ‘반드시 농사를 짓는 자식(후계자)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가진 농업인은 11.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3-14)

표 3-14. 농사를 그만둘 때 농지 처분 방안

단위 : 명, %

구 분	경작규모						전체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자식(후계자) 물려줌	9.3	8.4	9.6	11.3	12.0	14.9	95(11.1)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줌	39.5	41.6	32.4	35.8	28.7	29.7	289(33.8)
매각	23.3	22.7	19.2	23.8	20.0	25.0	189(22.1)
임대 또는 영농 대행	25.6	26.6	36.7	26.5	38.0	28.6	266(31.2)
기 타	2.3	0.7	2.1	2.6	1.3	1.8	15( 1.8)
응답자수	43	154	188	151	150	168	854(100.0)

- 이를 경작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농사를 짓는 자식에게 대물림하겠다’는 의사는 대체적으로 경작규모가 큰 농가에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항목에서는 계층간에 특징적인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 4.3.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견해

- 정부는 2002년 농지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하고 농촌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농지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개정안을 만들어 2003년 1월 시행한다.<sup>22</sup>
- 이에 대해 농업인들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살펴본 결과, ‘농지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71.0%로 ‘반대한다’는 의견(21.9%)보다 월등히 높아 농업인들은 대체적으로 농지규제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15)
- 경작규모별 계층간에는 찬성하는 입장은 3ha 이상의 농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계층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고 평가를 유보한 계층은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계층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 이같은 조사결과는 쌀값 하락 여파로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농지

---

22. 농지법 개정안은 49년 농지개혁법 제정 때 소수 지주의 농지 독점을 막기 위해 포함된 농지소유상한 조항을 52년 만에 완전 폐지하고, 농촌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농민의 주말농장용 농지소유와 농촌지역 레저시설 설치 허용, 농지조성비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있다.

거래제한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증가했던 2001년도 조사결과와<sup>23</sup>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정부의 농지규제완화 내용이 비교적 농업인들의 기대치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5.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

구 분	경작 규모						전체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찬성한다	61.4	69.3	73.4	71.7	68.2	74.4	608(71.0)
반대한다	22.7	19.6	19.7	20.4	26.5	23.2	187(21.9)
잘 모르겠다	15.9	11.1	6.9	7.9	5.3	2.4	61( 7.1)
응답자수	44	153	188	152	151	168	856(100.0)

- 농지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6%가 ‘도-농 균형발전’을 이유로 들고 있어 농지규제 완화로 농촌에 대한 투자 유치와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6)
- 이밖에, ‘농촌지역 땅값 상승으로 재산증식’ 효과가 있을 것으로

23. 2001년 조사에서 농업인 71.3%는 ‘농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현행 농지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 17.1%와 6.2%에 그쳐 대다수 농업인들은 농지규제 완화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하는 농업인도 20.1%로 다음 순위를 차지해 농지규제 완화로 농지값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민 농촌 이주와 귀농 확산’을 꼽은 농업인도 16.3%에 달하였다. 반면,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창출’이라는 응답은 8.7%에 그쳐 농외소득 증대 효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작규모별 계층간에는 3ha 이상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서 ‘도-농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를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농외소득 창출’과 ‘이주와 귀농 확산’에 대한 기대는 0.5ha 미만의 영세 농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3-16. 농지규제 완화 찬성 이유

단위 : 명, %

구 분	경작규모						전체
	0.5ha 미만	0.5~1ha	1~1.5ha	1.5~2ha	2~3ha	3ha 이상	
도-농 균형발전	40.8	54.2	49.6	54.6	57.3	60.8	331(54.6)
농외소득 창출	25.9	6.5	6.6	11.1	5.8	9.6	53( 8.7)
재산 증식	7.4	19.6	27.0	18.5	18.4	18.4	122(20.1)
이주와 귀농 확산	25.9	19.6	16.1	14.8	18.5	11.2	99(16.3)
기 타	0.0	0.0	0.7	0.9	0.0	0.0	2( 0.3)
응답자수	27	107	137	108	103	125	607(100.0)

- 농지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반대 이유를 물어본 결과는, ‘난개발과 환경 파괴’(27.7%)를 가장 우려했으며, 다음으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27.2%), ‘땅투기 조장’(23.4%), 그리고 ‘농업·농촌 공동화 초래’를 우려하는 농업인도 21.2%에 달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제시되었다.(표 3-17)

표 3-17. 농지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경작규모						계
	0.5ha 미만	0.5~ 1ha	1~ 1.5ha	1.5~ 2ha	2~ 3ha	3ha 이상	
땅투기 조장	40.0	36.7	21.6	6.6	25.6	21.0	43(23.4)
난개발과환경파괴우려	20.0	23.3	21.6	46.7	20.5	31.6	51(27.7)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20.0	23.3	27.0	30.0	33.3	23.7	50(27.2)
농업농촌공동화초래	20.0	16.7	29.7	16.7	18.0	23.7	39(21.2)
기 타	0.0	0.0	0.0	0.0	2.6	0.0	1( 0.5)
응답자수	10	30	37	30	39	38	184(100.0)

- 경작규모별 계층간에는 '땅투기 조장' 우려는 0.5ha 미만의 농가에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는 1.5ha~2ha 농가에서, '도농간 소득격차'는 2ha~3ha 농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계층간에 특징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IV. 농업·농촌 정보화관련 의식

- 농업·농촌의 정보화 진척 정도와 농업인들의 정보화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2000년에 이어 실시한 이번 정보화 관련 조사에서는 컴퓨터 등 농가의 정보화관련 장비 보유 정도, PC통신이나 인터넷 활용 정도, 정보접근 채널, 정보화 진전에 따른 농가단위 대응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1. 정보화장비 보유와 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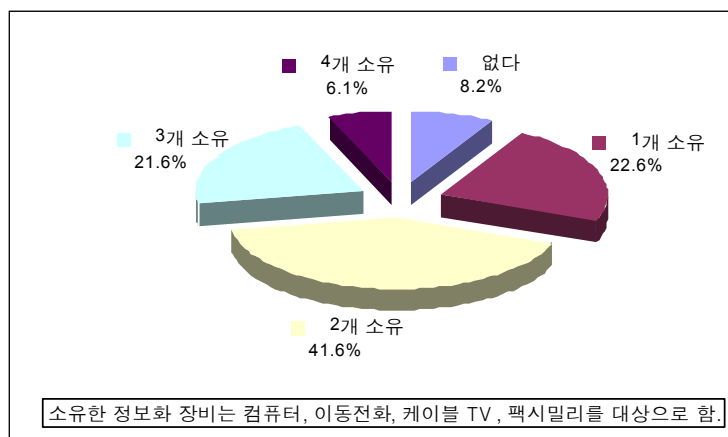
#### 1.1. 정보화장비 보유 현황

- 농업인들이 정보화와 관련해 어떤 장비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컴퓨터와 휴대폰, 케이블 TV, 팩스 등 가장 일반적인 정보화 장비들을 제시하고 소유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이중 2가지를 소유한 농가가 4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개만 소유하고 있다는 농가가 22.6%, 3개를 소유하고 있다는 농가가 21.6%로 나타났으며, 4개 모두 소유하고 있다는 농가는 6.1%에 그쳤다. 또, 아무것도 소유



하고 있지않은 농가는 8.2%로 조사되었다.(그림 4-1)

그림 4-1. 정보화 장비 보유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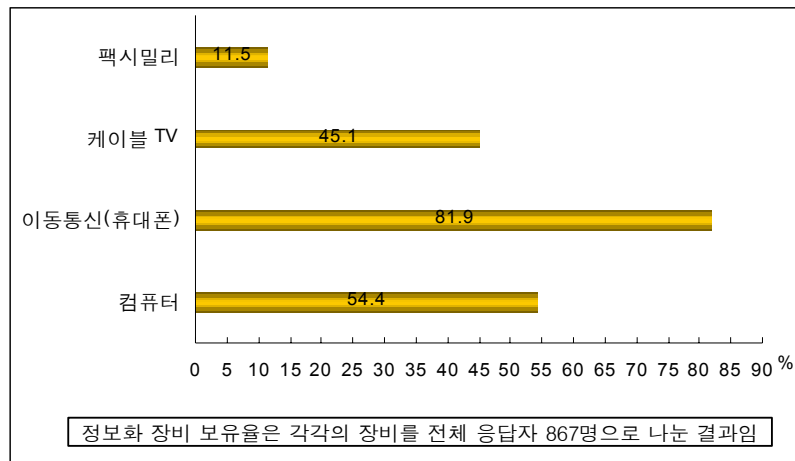


- 또, 각 정보화 장비별 보유율은 컴퓨터 보유율이 54.4%로 2000년 조사결과<sup>24</sup>(50.6%)보다 3.8%p 증가에 그쳤으며, 반면 휴대폰 보유 농가는 81.9%로 나타나 농업인 10명중 8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보화 장비 중 이동통신 가입은 주거환경 특성상 많이 보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그림 4-2)
- 이밖에,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있는 농가도 45.1%에 달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팩시밀리는 보유율이 11.5%에 그쳤다.

24. 「2000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5. 통계청, 「2002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인구 1백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61.4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정보화 장비별 보유율



## 1.2. 정보화장비 이용 실태

- 컴퓨터 보유능가를 대상으로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59.7%가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40.3%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4-1)

표 4-1.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 경험 유무

단위 : 명, %

구 분	연 령 별				전체
	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있다	74.7	55.6	44.7	26.3	268(59.7)
없다	25.3	44.4	55.3	73.7	181(40.3)
응답자수	190	126	114	19	449(100.0)

-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미만 계층이 74.7%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은 26.3%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기록해 연령이 낮을 수록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와 함께, PC통신이나 인터넷 이용 용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5.6%가 ‘농업정보 수집’을 꼽아 가장 높은 이용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생활정보 수집’(22.8%), ‘자녀 학습’(18.8%), ‘홈페이지 운용’(11.3%), ‘오락·채팅’(5.7%), ‘동호인과의 정보교류’(5.4%)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4-2)

표 4-2. PC통신 및 인터넷 이용 용도

단위 : 명, %

구 분	응답합계	응답1	응답2
자녀학습	102(18.8)	97(35.7)	5( 2.0)
오락채팅	30( 5.7)	16( 5.9)	14( 5.6)
농업정보 수집	189(35.6)	134(49.3)	55(21.9)
생활정보 수집	116(22.8)	19( 7.0)	97(38.7)
홈페이지 운용	57(11.3)	5( 1.8)	52(20.7)
동호인과의 정보 교류	27( 5.4)	1( 0.4)	26(10.4)
기 타	2( 0.4)	0( 0.0)	2( 0.8)
합 계	523(100.0)	272(100.0)	251(100.0)

### 1.3. 농업인들의 정보 입수 경로 및 매체의존 경향

- 농업인들의 정보입수 경로와 매체의존 경향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주로 ‘텔레비전’(68.8%)과 ‘일반신문’(14.1%), ‘농업관련 신문잡지’(12.7%)를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사와 관련한

정보는 ‘농업관련 신문·잡지’(62.7%)와 ‘텔레비전’(12.4%), ‘영농교육’(11.6%)에 의해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최근 수년간 농업인들의 정보입수 경로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

표 4-3. 농업인들의 정보입수 경로

단위 : 명, %

구 분	세상소식	농업소식
일반신문	121(14.1)	19( 2.2)
농업관련 신문잡지	109(12.7)	536(62.7)
라디오	14( 1.6)	29( 3.4)
텔레비전	592(68.8)	106(12.4)
영농교육	4( 0.5)	99(11.6)
홍보용 책자	0( 0.0)	12( 1.4)
가족, 이웃주민, 반사회	8( 0.9)	38( 4.4)
인터넷·PC통신 등	12( 1.4)	16( 1.9)
합 계	860(100.0)	855(100.0)

○ 다만, 농업정보 입수 경로중 ‘농업관련 신문·잡지’, ‘영농교육’, ‘인터넷·PC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전년도에 비해 약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sup>26</sup> 그 정도는 미미하였다. 특히, 인터넷이나 PC통신 등 정보화 장비들을 이용한 정보수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일반적인 정보화 발전 속도에 비해 농촌지역 확산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 이와 같은 경향으로 볼 때 농업인들은 일반 소식은 텔레비전을

26. 「2001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는 농업관련 정보의 입수경로 중 ‘농업관련 신문·잡지’(64.5%), ‘영농교육’(8.9%), ‘인터넷과 PC통신’(0.9%) 등으로 조사되었다.

통한 정보획득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사와 관련한 정보는 관련 전문지나 잡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텔레비전에서 농업관련 정보 제공이 미미하다는 것과는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텔레비전을 통한 농정 홍보와 정보 제공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농업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과 요구

### 2.1. 농업인들의 정보화 대응 실태

- 농업인들이 농업·농촌의 정보화 진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관심은 있으나 실제 참여하지는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4%를 차지했고, 이에 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31.6%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비교적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이 전체의 86.0%에 달해 농업·농촌 정보화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상당수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표 4-4)
- 반면, ‘관심은 없으나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10.8%)는 응답과 ‘관심도 없고 참여할 생각도 없다’(3.2%)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도 14.0%로 나타나 여전히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농가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과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 농업인을 연령 계층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농업인은 연령대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심

은 있으나 참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젊은층에서 비교적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관심이 없다'는 농업인 층은 연령대가 높을 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표 4-4. 농업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대응

단위 : 명, %

구 분	연 령 별				전체
	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높은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33.8	28.4	31.8	34.1	268(31.6)
관심은 있으나 참여 못함	56.4	59.5	51.7	47.7	461(54.4)
관심은 없으나 노력함	9.3	9.8	12.1	11.4	91(10.8)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함	0.5	2.3	4.4	6.8	27( 3.2)
응답자수	204	215	340	88	847(100.0)

- '정보화에 관심은 있으나 참여하지 못한다'는 농업인들은 향후 정책적인 지원과 정보화 환경 개선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 본 결과, 가장 큰 이유를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45.1%)로 들고 있고, 다음으로는 'ADSL 미가설 등 정보화 환경 열악'(14.5%), '컴퓨터가 비싸 구입하지 못함'(14.1%), '비싼 정보통신 요금'(12.7%), '시간이 없다'(11.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4-5)
- 이같은 조사결과를 연령대별로 비교해 본 결과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높을 수록, '정보화 환경이 열악하다'와 '정보통신 요금이 비싸다', '시간이 없다'는 응답은 연령대가 낮을 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 즉, 고령 농업인은 경제적인 이유보다 컴퓨터 조작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젊은 층에서는 정보화 환경과 경제적인 문제가 정보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5. 농업인들의 정보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단위 : 명, %

구 분	연 령 별				전체
	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컴퓨터 구입비용이 과다	3.7	18.7	18.0	10.3	62(14.1)
정보화 환경 열악	25.2	12.2	11.6	5.1	64(14.5)
컴퓨터 사용을 못함	25.2	44.7	53.5	64.1	199(45.1)
비싼 정보통신 요금	23.4	11.4	8.7	5.1	56(12.7)
시간이 없음	18.7	11.4	7.0	10.3	50(11.3)
기 타	3.8	1.6	1.2	5.1	10( 2.3)
응답자수	107	123	172	39	441(100.0)

## 2.2. 농업인들의 정보화 대한 요구

- 농업인들은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38.6%)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컴퓨터 보급 지원’(22.1%), ‘정보통신 요금 할인’(20.1%),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8.4%), ‘농업관련 S.W개발 보급’(7.7%)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밖에 ‘농업·농촌관련 콘텐츠 개발’(1.6%), ‘품목 및 지역별 인터넷 동호인 모임 지원’(1.0%) 등의 요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표 4-6)

- 연령별로는 컴퓨터 보급과 교육확대는 연령층이 높을 수록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터넷망 설치와 S.W 개발 보급 등의 지원 요구는 연령층이 낮을 수록 많았다. 특히, ‘정보통신 요금 할인’에 대한 요구는 연령 계층간 구분없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4-6. 농업인들의 정보화와 관련한 요구

단위 : 명, %

구 분	연 령 별				전체
	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컴퓨터 보급 지원	10.8	23.3	27.6	26.3	179(22.1)
컴퓨터 교육 확대	33.0	37.4	42.0	42.5	312(38.6)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16.3	8.7	4.4	3.7	68( 8.4)
농업관련 S.W 개발보급	17.2	5.8	3.4	5.0	62( 7.7)
농업농촌-컨텐츠 개발	1.5	1.0	2.2	1.2	13( 1.6)
품목, 지역별동호인모임	1.0	1.0	0.9	1.3	8( 1.0)
정보통신 요금 할인	20.2	22.3	18.5	20.0	162(20.1)
기 타	0.0	0.5	0.9	0.0	4( 0.5)
응답자수	203	206	319	80	808(100.0)

- 이같은 조사결과는 2000년도 말에 실시했던 조사에서도 유사한 요구<sup>27</sup>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농업인들이 정보화에 참여하는데 인프라 미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고, 특히 PC 교육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27. 「2000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농업인들은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28.9%)를 가장 많이 꼽았다.



## V. 기타 의견 및 건의 사항

- 농업인들에게 조사문항에 다 제시하지 못한 의견을 기타의견으로 자유롭게 기술토록 한 결과 많은 농업인들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가 많았으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과 쌀산업 구조개편 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주문하였다. 이와 함께, 농지규제 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농촌 복지 확충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WTO/DDA농업협상과 FTA 협상 등 농업개방과 관련해서는 피해대책 마련을 강조하였고, 정부와 일반 국민의 농업에 대한 관심도 촉구하였다.

### 1.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 농업정책이 농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러 기관들이나 단체의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 또, 정부는 재정지원보다는 농민의 마음을 바꿔야하며 농촌이 발전할 수 있는 꿈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농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고, 정부가 농촌에 지원하는 자금이 젊은이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고령자들에게겐 혜택이 별로 없다며 가급적 고른 연령에게 공평하게 지원해 주길 요망하였다.

- 쌀소비 촉진과 관련해 이웃 나라 일본은 수입 밀가루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여 쌀소비를 촉진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농업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 2.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한 제안

- 농민으로서의 가장 큰 불만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공산품 가격은 올라만 가는데 농산물 가격은 갈수록 낮아지므로 적자만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며,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 보장제’를 실시해 주기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생산자 가격은 폭락해도 소비자 가격은 변동이 없다면 ‘가격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 이와 함께, 농산물의 올바른 수급계획으로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또한 유통구조의 개혁으로 중간 상인에게 치중되어 있는 이익을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고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가격 폭등락이 없는 안정적인 유통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여론도 있었다.

## 3. 직불제 실시에 대한 의견

- 논 농업에 대한 각종의 직불제가 낮은 보상과 수혜대상의 제한으로 현실성이 없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직불제 실시를 요망하였고, 공적 자금으로 1개 기업에 몇 천

역을 예사롭게 쓰면서도 어려운 농민에게는 지나치게 아끼고 있다는 점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직불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 특히, 논농업직접직불제의 대상면적이 2ha까지로 상한선을 두는 등 제한해 쌀 전업농의 규모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한선을 폐지하여 소농과 대농이 똑같이 혜택을 받게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정부가 실시하는 논농업직불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대농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1ha미만의 소농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논농업 보전을 위하여 논농업 직불제를 실시하면서 친환경농업을 규정해 농약과 비료 사용을 기록하게 하는데, 이같은 조치는 형식적이어서 똑같은 기준량에 의한 장부정리에 불과하다며, 복잡하고 현실성이 없는 제도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또, 약정수매를 제외한 수확량에 대하여 시중시세가격 하락시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제’ 역시 신청자에게만 지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을 전 대상농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일부 농업인은 현재 논농사에만 한정해 실시하는 각종 직접지불제도를 벼농사 구조조정 차원에서 밭농사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 4. 영농자금 · 농가부채

- 영농자금과 농가부채에 대한 의견도 집중적으로 제기돼 영농자금 대출을 단기(1년)로 하지말고 장기로 하며 농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농자금이나 일반자금을 대출받고 싶어도 개인의 한도액이 초과하여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규모까지는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하는 요구도 있었다.
- 또, 40~50대의 농가부채 · 부도현상을 정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 농가부채를 방관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농업시설투자(시설하우스)등 기반조성에 들어간 자금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금리인하 등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반면, 일부 농업인은 농가 부채 문제가 정부의 책임인냥 농업관련 단체에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정책 실패 등으로 진 빚은 10%도 안된다면서 빚 탕감보다는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 5. 농산물 수입 개방

- 한·칠레 FTA 체결에 동의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공산품 수출의 이익금을 농업분야에 돌려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우리 나라가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세계경제 흐름에 편승하면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기업에서 얻는 이익금의 일부를 농민들을 위한 생

산비 보조나 소득 보전 등에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방에 따른 농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부터 법제화 한 후 수입 개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각 국과 FTA 체결을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농산물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 또, WTO 농업협상과 한-칠레 FTA협상, 중국과의 마늘 협상에서 정부가 ‘밀실협상’으로 일관했다며, 농업개방 협상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6. 농촌 인력 부족 및 후계인력 육성

-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농기계 구입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를 감안해 쌀 전업농 지원과 농지구입 자금 지원 연령을 70세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7. 농지정책과 농지법 개정

- 농지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고, 도시인들이 받은 사농고 농사는 짓지 않아 밭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는 농민들이 의욕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 아직까지 골짜기까지의 소규모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인력부족 때문에라도 최소한의 계단식 정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농지규모 확대 사업이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더 조장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도시자본 농촌 유치를 목적으로 비농업인 농지 소유 허용과 대체 농지 조성비 감면 등의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용 허가도 간편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반면, 무분별한 농지 소유는 환경파괴, 투기조장 등으로 이어져 농민들이 농업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정부에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농민이 원하는 농지를 구입 또는 팔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휴경제 실시에 대해서도 현재 마련된 시행 방안은 일시적인 방법 이므로 휴경 대신 축산 정책과 연계해 초지조성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경지정리 지구는 용수료가 잘 되어있으나 비진흥지역 및 기타 지역 용수로는 그렇지 않아 영농에 지장을 많이 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또한 잦으므로 용수로 개선 사업이 중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밖에 ‘농지은행’을 설립하여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모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기를 바란다는 주문도 있었다.

## 8. 영농자재(농기계, 비료, 농약 등)

- 일손 부족으로 기계화가 확대되는 것에 반해 기계값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 이러한 비싼 기계값에 비해 낮은 소득으로 부채만 늘어간다는 주장이 있었다. 또, 비료, 농약, 농자재 등이 너무 많은 종류와 상표명으로 유통되고 있어 사용시 혼돈이 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가 부족하다며 확충해 달라는 여론도 있었다.
- 또, 농기계 수리비 및 부속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면서 농산물은 싸고 공산품은 비싸져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농기계 보조금을 최소 60~80%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기름값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유 혜택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 농촌의 노인들이 일하기 쉽게 경량급 동력 경운기와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등을 개발해 보급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려해 ‘농기계 조합’의 설립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 9. 농업·농촌 정보화

- 정부가 개설해 놓은 인터넷 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이지 컴퓨터를 소유하지 못한 많은 농민들에게는 소외감만 불러온다는 지적이 있었고, 농업경영에 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보급 확대나 유통, 법적·행정적 절차 완화 및 대행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로 농민들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환

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다.

- 농촌 정보화와 관련, 비싼 컴퓨터 가격으로 인해 보급률이 낮으므로 정부차원의 보조라든지 장기용자 형식의 자금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농업소득에 비해 인터넷 이용료가 비싸며 이로 인해 이용에 불편을 주므로 인터넷 이용료 할인혜택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었다.
- 농촌의 고령화로 정보화 교육이 절실한 상태이므로 희망자에 한하여 컴퓨터 교육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고, 농림부 홈페이지 등 관련기관에서 교육 사이트를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10. 농업관련 기관 개혁

- 일선 농협은 시·군 단위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농협의 개혁으로 유통구조의 현실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협구조조정에 관해 회원 농협만 독촉하지 말고 중앙회 차원에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 특히 농약, 계분 등 농자재를 구입 할 때 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는 형식 때문에 일선농협과 농민들은 큰 피해를 보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 하였다.

#### 11. 농작물 피해 보상

- 태풍 ‘루사’에 의한 피해 보상이 모든 농지에 대하여 평균치를 보



상한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피해 보상제도를 개선하여 실제 피해 본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기상재해로 인한 과수 농가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 12.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

- 농사를 짓는 대부분의 용수는 ‘지하수’인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하수를 신고 후 사용하라는 방침 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환경을 살리고 자원을 재활용 한다는 차원에서 농촌 들녘에 있는 농약병, 비닐 등 많은 종류의 농촌폐자재 수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 농촌지역에서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 농민들도 농촌을 떠나려 한다며 교육시설 확충과 여건 개선을 주문 하였고, 농촌지역에 학교, 문화시설, 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이웃간 대화가 단절되는 등 농촌 공동화가 초래되고 있다며 문화복지시설 확충도 주문하였다.
-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장학제도 확대 및 농촌 출신 학생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많이 설치하여 도시로 유학하는 학생에 대한 부담을 줄여 달라는 여론이 있었고, 농촌에 대한 부당한 의료 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 이와함께, 농촌의 고령층에게 양로시설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혁신적인 복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13. 새정부에 대한 건의

- 새정부에 바라는 농정으로는 농가부채경감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을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상당 수 있었다. 또 개방 농정시대를 맞아 농민의 의견과 농촌 현실이 감안된 협상전략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VI. 요약 및 시사점

- 이 조사연구에서는 지난 수년간 일관되게 실시해 온 농업인들의 의식구조 변화와 2002년 이슈가 되었던 농정현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개방농정기에 접어든 1994년 UR 출범 이후 10년간의 농업인 의식변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써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WTO 도하개발아젠다, FTA 등 농업개방 협상에 따른 대책 마련과 향후 농업정책 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 쌀산업 구조조정 논의, 한-칠레 FTA협상 타결, WTO 농업협상 진전, 중국산 마늘 SG(긴급수입제한조치) 종료 등 농업분야 시장개방 압력이 그 어느때 보다 강화된 시기에 실시된 「2002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식 및 태도는 부정적인 반응이 증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농업협상 등에 따른 기대감 상실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에서 농사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농산물 가격’(28.0%)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농산물 수입개방’(31.6%)을 꼽아 최근 수년간 이같은 경향에

는 큰 변화가 없었다. 최근 수년간 농업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꼽고 있는 ‘농산물 가격’은 농가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급 조절과 가격 보장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조사에서도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해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이 38.6%에 달하는 등 미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강도높은 유통개혁의 필요성을 뒷받침 하고있다.

- 특히, ‘농산물 수입개방’을 애로사항으로 꼽은 농업인은 2002년 31.6%로 집계돼 '94년 이후 2~4.5%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칠레 FTA 협상 타결로 구체적인 피해 작목과 규모가 제시되고 있고, DDA농업협상에서도 개방폭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개방에 따른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또, 농업인들은 5년전에 비해 교육, 문화시설 등 농촌생활 여건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 농촌경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농가소득, 농가부채, 수입개방과 관련한 사안은 악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5년 후나 1년 후의 농촌생활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같은 반응은 무엇보다 쌀산업 여건변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갖게하는 요인으로 분석돼 개방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등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런 가운데 농업인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아 응답자 10명중 8명(80.6%)은 농업이 여전히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에 대해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56.7%)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인들의 농업종사 만족도는 IMF 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만족한다(매우 만족 포함)’는 응답 비율이 '99년 21.4%에서 2002년에는 7.6%를 기록함으로써 IMF 체제이후 만족도가 급속히 하락해 '94년 UR 출범 이후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농사만족도가 매년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는 ‘소득 보장 미흡’(43.4%)과 ‘수입개방에 따른 장래 불안’(38.3%)을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인들의 ‘국민의 정부’ 5년간의 농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보통 이상’이라는 응답이 10명중 3명 정도(33.9%)였고,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6.1%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 ‘국민의 정부’가 역점추진 했던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농가부채 및 연대보증 해소 노력’를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농정조직개편과 제도개선’ 및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 등도 어느정도의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였다.
- 이에 비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과 국민의 정부가 역점추진했던 농산물 유통개혁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종료, 한-칠레 FTA협상 타결 등으로 국제농업협상에 대한 대응도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정부 후반에 돌출되기 시작한 쌀 재고 증가와 가격 하락 등으로 벼농사 구조조정과 쌀값 안정대책

도 부진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새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는 ‘농가부채 해결방안 제시’(30.0%)를 꼽았고, 집권기간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농업정책으로는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29.8%)을 꼽아 농업인들은 차기정부 출범 이후 농가부채 해결과 국제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 농업인들은 2004년 쌀 시장개방 재협상을 목전에 두고도 ‘현재의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를 넘는 50.8%로 조사되었다. 다만 쌀 재고 증가와 가격하락, 쌀 개방 재협상 등으로 1년새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20.9%p나 감소한 결과를 보여 향후 비교적 규모가 작은 농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02년 10월에 도입돼 신청을 마친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37.9%가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하였고,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농가는 ‘보전금액이 적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47.9%) 꼽았다. 특히, 경작규모가 큰 농가는 ‘보전금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경작규모가 작은 농가는 ‘보험금액’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2년 10월에 협상이 타결된 한-칠레 FTA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농가는 12.4%에 지나지 않았으나, 농업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81.4%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해 협상에 따른 농가 피해 정도에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였다.

- 한-칠레 FTA 비준에 대해서는 피해보전대책이 마련돼도 농업전반에 부작용이 있으므로 비준에 반대한다는 응답비율이 39.5%인 반면,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5.5%)과 피해대책 마련시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입장(48.2%)이 과반수를 넘어 불가피성은 어느정도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 농지에 대한 가치 인식에 대해서는 농업인 57.9%가 ‘생산수단으로써의 가치’를, 36.9%는 ‘자산으로써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지 대물림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농사를 짓든 안짓든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는 의견이 33.8%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으로 ‘임대 또는 영농대행 하겠다’는 응답이 31.2%로 자식에게 대물림하겠다는 견해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반드시 농사를 짓는 자식(후계자)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가진 농업인은 11.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2003년 1월 시행되는 개정농지법에 대해서는 ‘농지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이(71.0%) ‘반대한다’는 의견(21.9%)보다 월등히 높아 농업인들은 대체적으로 농지규제 완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난개발을 우려하는 여론도 있었다.
- 농업·농촌 정보화와 관련해 컴퓨터 보유율은 54.4%로 2년전 조사결과(50.6%)보다 3.8%p 증가에 그친 반면, 휴대폰 보유농가는 81.9%로 나타나 농업인 10명중 8명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동통신은 많이 보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농촌의 정보화 진전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실제 참여하지

는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4%를 차지했으며, 가장 큰 이유를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45.1%)로 들고 있고,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38.6%)를 가장 많이 꼽아 PC교육이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는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농가경제가 악화되고 도·농간 소득과 보건의료 등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심화되어 농업인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인들은 '98년 IMF체제 출범 이후 영농비 상승과 부채 증가, 개방압력 가속화로 농업·농촌에 대한 기대감을 급격히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와 함께, 농업인들은 지난 5년간의 농정 평가에서 '농가부채' 해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차기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도 '농가부채'를 꼽고 있어 농업인들의 농가부채 증가에 대한 불안감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농업인들의 의식변화를 반영해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과 함께 농업개방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 및 농업·농촌에 대한 중장기 비전 제시를 통해 농업인들의 의식이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록

「2002년 농업인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조사표

■ 농업·농촌 전반에 대한 의식

1) 농사와 관련해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① 농산물 가격                      ② 추곡수매
- ③ 영농자금·농가부채              ④ 농산물 수입개방
- ⑤ 농촌지역개발                      ⑥ 농촌인력
- ⑦ 농작물병충해, 기상·기후조건
- ⑧ 농기계, 비료 등 농자재          ⑨ 영농시설 현대화
- ⑩ 농지문제(매매, 가격, 진흥지역, 임대차 등)
- ⑪ 기타\_\_\_\_\_

2)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 이었습니까? ( )

- ① 영농자금부족, 농가부채          ② 농작물 병충해
- ③ 농촌인력 부족                      ④ 농사정보 부족
- ⑤ 기상, 기후조건                      ⑥ 농산물 가격불안정
- ⑦ 농지문제                              ⑧ 수입개방                      ⑨ 기타\_\_\_\_\_

- 3) 5년전에 비해 올해(2002년)의 '농촌 생활수준'은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 )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마찬가지로이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 4) 작년(2001년)과 비교해서 올해(2002년)의 '농촌 생활수준'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 )
- ① 매우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③ 마찬가지로이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매우 나빠졌다
- 5) 올해(2002년)와 비교해서 5년후 '농촌생활 수준'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
- ①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다  
② 현재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③ 현재보다 살기 어려울 것이다
- 6) 도시와 비교해서 앞으로 5년후 농촌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
- ① 도시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② 도시만큼 살게 될 것이다  
③ 도시보다 살기 어려운 곳이 될 것이다
- 7) 올해와 비교해 내년(2003년) '농업 경영여건'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 )
- ①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다  
② 올해와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③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8) 5년전과 비교하여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좋아졌다고 생각 하시면 ①, 조금 좋아졌으면 ②, 보통은 ③, 조금 나빠졌으면 ④, 매우 나빠졌으면 ⑤, 이런식으로 모든 항목의 해당란에 √하여 주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1) 농사방법과 기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 문화복지시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 소득 향상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4) 도로교통등 생활환경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5) 교육환경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6) 농가 자금사정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7) 농산물 가격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8) 농촌일손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9) 자녀교육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0)농외소득기회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1)영농(농지)규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2)농산물 유통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3)농사 수익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4)농가부채·영농자금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5)농업의 중요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6)공동생활문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7)이웃간 대화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8)정부의 농업인식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19)일반국민의 농업인식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0)개방에 따른 농사여건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1)농자재수급 및 가격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22)농민의 농업애착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9) 농촌의 생활중 좋아진 점이 있다면 위에 열거한 사항중 어떤 항목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2가지만 번호로 적어 주십시오. (     ,     )
- 10) 농촌의 생활중 나빠진 점이 있다면 위에 열거한 사항들중 어떤 항목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2가지만 번호로 적어주십시오. (     ,     )
- 11)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직업으로써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불만이다    ⑤ 매우 불만이다
- 12) (문 11에서 ④⑤번에 답하신 분만)  
농업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     )  
① 노력에 비해 보수가 타분야에 비해 낮다 (소득 보장 미흡)  
②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  
③ 타 분야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  
④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장래가 불안하다  
⑤ 농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좋지 않다  
⑥ 기타\_\_\_\_\_
- 13)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① 매우 중요하다    ② 중요한 편이다    ③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 14) 귀하는 앞으로도 계속 농촌에 살 계획입니까? (     )  
① 농촌에 계속 살겠다  
② 농촌을 떠날 생각이다

- ③ 떠났다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 올 생각이다
- ④ 모르겠다

15) (문 14에서 ①번에 답하신 분만)

앞으로 농촌에서 계속 사시겠다고 하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농촌의 생활환경이 좋아서
- ② 고향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 ③ 농촌에서도 잘 살 수 있으므로
- ④ 이제까지 농촌에 살아서 모든 생활근거가 농촌에 있으므로
- ⑤ 농사이외에 다른 기술이 없어서
- ⑥ 나이가 많아 직업을 바꾸기 어려워서
- ⑦ 도시에서 살 능력이나 기술이 없어서
- ⑧ 심리적인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 ⑨ 여생을 보내기 위해
- ⑩ 기타 \_\_\_\_\_

16) (문 14에서 ②③번에 답하신 분만)

농촌을 떠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자녀 교육을 위해서
- ② 농사는 수익성이 없으므로 직업을 변경하여 돈을 벌기 위해
- ③ 농촌의 생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변해서
- ④ 노동력 부족 등 농사짓는 여건이 어려워서
- ⑤ 농사규모를 늘려갈 전망이 없어서
- ⑥ 자녀들이 도시에 정착해 있어서
- ⑦ 농촌에는 농사이외에 할만한 일이 없어서
- ⑧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사짓기가 더욱 어려울 것 같아서
- ⑨ 기타 \_\_\_\_\_

- 17) (문 14에서 ②③번에 답하신 분만)  
농촌을 떠나신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  
① 1년 이내    ② 3년 이내    ③ 5년 이내  
④ 10년 이내    ⑤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 18) 귀하께서는 자녀에게 농업을 권하시겠습니까? ( )  
(자녀가 이미 다른 직업을 선택했다면 직업을 가질 자녀가 있는 것으로  
가상해 응답 하시기 바람)  
① 농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협조하겠다  
② 다른 직업을 택하도록 하겠다  
③ 자녀의 뜻대로 하겠다  
④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
- 19) 향후 농업·농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식량의 안정적 공급    ② 자연환경 보전    ③ 전원생활 공간 제공  
④ 국토의 균형 발전    ⑤ 전통문화 보존, 계승  
⑥ 타 산업에 노동력 공급    ⑦ 기타\_\_\_\_\_

■ 농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요구

- 20) 귀하는 '국민의 정부' 농정 5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  
① 매우 잘했다    ② 대체로 잘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잘 못했다
- 21) 다음은 구체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역점 추진한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입  
니다.

(각 문항마다 매우 잘했으면 5점, 대체로 잘했으면 4점, 보통이면 3점, 잘 못했으면 2점, 매우 잘 못했으면 1점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예) ① 협동조합 등 농정조직 개편과 제도개선 ( 3 )  
② 농가부채 및 농업인 연대보증 해소노력 ( 4 )  
이런식으로 각 문항마다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① 협동조합 등 농정조직 개편과 제도개선 ( )
- ② 농가부채 및 농업인 연대보증 해소노력 ( )
- ③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기반 구축 ( )
- ④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 유통구조 개혁 ( )
- ⑤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농업 육성 ( )
- ⑥ 쌀 재협상 등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 ( )
- ⑦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 )
- ⑧ 직불제·재해보험도입 등 소득안정망 구축 ( )
- ⑨ 벼농사 구조조정과 쌀값 안정대책 ( )
- ⑩ 농촌지역 정보화 격차해소 ( )
- ⑪ 농촌 복지대책 ( )

22) 차기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제시해야할 농정현안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쌀 재협상 기본 전략
- ② WTO 및 FTA 농업협상 기본 전략
- ③ 농가부채 해결방안
- ④ 농가 소득보전 확대 방안
- ⑤ 쌀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
- ⑥ 기타 \_\_\_\_\_

23) 차기 정부가 집권기간 동안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농업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① 강력한 농업 구조조정
- ② 쌀 재협상 등 국제 농업협상에 적극 대응
- ③ 농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융자 확대
- ④ 가격과 품질경쟁력 확보를 유통개혁
- 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 ⑥ 수출농업 육성과 해외시장 개척
- ⑦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벤처농업 활성화
- ⑧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⑨ 농촌 생활개선과 복지대책 강화
- ⑩ 기타\_\_\_\_\_

■ 쌀산업 여건 변화에 관한 의식

24) 정부는 쌀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조정제 도입 등 감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     )

- ① 적극적인 감산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식량안보 차원에서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해야 한다
- ③ 적정생산량 규모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 ④ 일시적인 생산과잉 현상이므로 소비촉진 등 재고 해소대책이 우선 필요하다
- ⑤ 잘 모르겠다

25) 귀하는 쌀 생산조정제에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     )

(쌀 생산조정제는 전작 및 휴경을 실시하는 약정을 체결하면, 임차료 수



준의 보상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임)

- ① 가입하겠다 ② 가입하지 않겠다

26) (벼 재배 농가만 기재)

귀하는 쌀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과 2004년 쌀 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해 벼 재배면적을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① 재배면적을 점차 줄일 계획이다  
② 현재의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③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개방 속도를 보가며 결정하겠다

27) 벼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귀하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이 농가 소득안정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시 명목 조수입 하락분의 80%를 보전하는 직불제로, 참여농가는 기준 조수입의 0.5%를 농가부담 보험금으로 적립해야 함)

- ①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별 도움이 안될 것이다  
④ 오히려 소득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28) (문 27번에서 ③④번 응답하신분만)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보전금액이 너무 적어 효과가 없을 것이다

- ② 농가부담 보험금 감안때 별 도움 안될 것이다
- ③ 농번기에 계약이 이뤄져 불편하고,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 ④ 쌀값 하락을 부추겨 역효과가 날 것이다
- ⑤ 기타\_\_\_\_\_

■ 한-칠레 FTA 협상에 대한 의식

- 29) 지난 10.24일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귀하는 협상 내용을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 )
- ①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
  - ② 협상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농업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언론 등을 통해 알고 있다
  - ③ 협상 내용을 전혀 모른다
- 30) 한-칠레 FTA 체결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국가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② 농업분야 피해 보전 대책이 마련되면 체결에 찬성한다
  - ③ 피해보전 대책이 마련돼도 농업 전반에 부작용이 있으므로 체결에 반대한다
  - ④ 잘 모르겠다
- 31)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세안을 비롯해 여러나라와 FTA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 정부의 농업과 관련한 FTA협상 전략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국가 전체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②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 법제화 등 사전 대책마련 후 협상해야 한다
- ③ 농업강대국과는 FTA체결을 회피해야 한다
- ④ 기타\_\_\_\_\_

■ 농지제도 변화에 대한 의식

- 32) 귀하는 농지에 대해 자산가치와 생산가치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 )
- ① 자산으로써의 가치    ② 생산수단으로써의 가치    ③ 잘 모르겠다
- 33) 귀하는 농사를 그만두게 되면 소유농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① 농사짓는 자식(후계자)에게 물려주겠다
  - ②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 ③ 매각하겠다
  - ④ 임대 또는 영농 대행하겠다
  - ⑤ 기타\_\_\_\_\_
- 34) 정부는 도시자본 농촌유치를 목적으로 비농업인 농지소유 허용과 대체농지조성비 감면 등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 합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③ 잘 모르겠다
- 35) (문 34번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만)
- 농지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농촌투자 활성화로 도-농 균형발전
  - ②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창출

- ③ 농촌지역 땅값 상승으로 재산 증식
- ④ 도시민 농촌 이주와 귀농 확산
- ⑤ 기타\_\_\_\_\_

36) (문 34번에서 ②번에 응답하신 분만)

농지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농촌지역 땅투기 조장
- ② 농촌지역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 ③ 도시근교와 지방농촌간 부익부 빈익빈 심화
- ④ 탈농 가속화로 농업·농촌 공동화 초래
- ⑤ 기타\_\_\_\_\_

■ 농업·농촌 정보화관련 의식

37) 귀하께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장비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 ① 컴퓨터      ② 이동전화(휴대폰)      ③ 케이블 TV      ④ 팩스

38) (문 37번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만)

귀하는 컴퓨터를 사용해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

- ① 있다      ② 없다

39) (문 38번에서 ①번에 응답하신 분만)

귀하는 인터넷과 통신을 주로 어디에 이용하고 계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① 자녀학습    ② 오락·채팅    ③ 농업정보 수집    ④ 생활정보 수집
- ⑤ 홈페이지 운용 (농산물 전자상거래 운영 및 활용)
- ⑥ 동호인과의 각종 정보 교류
- ⑦ 기타 \_\_\_\_\_

40)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얻고 계십니까?

(    )

- ① 일반신문    ② 농업관련신문, 잡지    ③ 라디오    ④ 텔레비전
- ⑤ 영농교육    ⑥ 홍보용 책자    ⑦ 가족, 이웃주민, 반사회
- ⑧ 인터넷·PC통신 등    ⑨ 기타\_\_\_\_\_

41) 농사와 관련한 소식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계십니까?(    )

- ① 일반신문    ② 농업관련신문, 잡지    ③ 라디오    ④ 텔레비전
- ⑤ 영농교육    ⑥ 홍보용 책자    ⑦ 가족, 이웃주민, 반사회
- ⑧ 인터넷·PC통신 등    ⑨ 기타\_\_\_\_\_

42) 귀하는 농업·농촌 정보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    )

- ①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
- ② 관심은 많으나 실제 참여하지는 못한다
- ③ 관심은 없으나 뒤쳐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 ④ 관심도 없고 참여할 생각도 없다

43) (문 42에서 ②번에 응답하신 분만)

실제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① 컴퓨터가 비싸 구입하지 못했다
- ② ADSL 미가설 등 정보화 환경이 열악하다
- ③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

- ④ 정보통신 요금이 비싸 부담된다
- ⑤ 시간이 없다
- ⑥ 기타\_\_\_\_\_

44)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컴퓨터 보급 지원 확대
- ② 컴퓨터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확대
- ③ 초고속 인터넷망 설치 확대
- ④ 농업경영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확대
- ⑤ 농업·농촌관련 콘텐츠 개발
- ⑥ 품목 및 지역별 인터넷 동호인 모임 지원 확대
- ⑦ 농촌 주민에 대한 정보통신 요금 할인 혜택 확대
- ⑧ 기타 \_\_\_\_\_

■ 현지통신원 개인 정보

A1>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해당 항목에 V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_\_\_\_\_ 道, 또는 광역시

- ① 평야지대      ② 산간지대
- ③ 준산간지대    ④ 도시근교

A2> 귀하의 연령은 올해 몇세입니까? ( )

- ① 50세 미만    ② 50~60세 미만    ③ 60~70세 미만    ④ 70세 이상

A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① 무학 ② 한학 ③ 국졸 ④ 중졸 ⑤ 고졸 ⑥ 대졸(퇴)이상

A4> 귀하의 영농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

① 10년 미만      ② 10~20년 미만      ③ 20년 이상

A5> 귀하의 전체 경작 규모는어떻게 되십니까? ( )

(소유 및 임차농지는 포함하되 임대농지는 제외)

① 없다                      ② 1,500평 미만  
③ 1,500-3,000평 미만      ④ 3,000-4,500평 미만  
⑤ 4,500-6,000평 미만      ⑥ 6,000-9,000평 미만  
⑦ 9,000평 이상

A6> 귀하의 농업경영에서 연간 판매액이 가장 많은 작목은 무엇입니까?

( )

① 수도작 ② 과수 ③ 노지채소 ④ 축산 ⑤ 시설원예 ⑥ 특작  
⑦ 기타 \_\_\_\_\_

A7> 귀하의 성명과 E-mail, 연락처를 적어주십시오.

▪ 성 명: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E-mail:

▪ 휴대폰:

A8> 농정 건의 및 기타 의견

## 참고 문헌

- 김동원, 조태희. 2001. 「2000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결과」 「농촌경제」, 제24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동원, 조태희. 2002. 「2001년도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결과」 연구자료 D16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민남, 최익수. 1982. “농민의 의식구조 변화” 「농촌경제」, 제5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완배 외, 「농업총조사 종합분석」 통계청 학술연구용역, 서울대학교
- 김정호 외, 2001, 「농가경제·부채 실태와 정책 과제」 정책연구보고 P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2001. 「농림업 주요통계」
- 농협조사월보, 2002. 12
- 박대식, 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연구보고 R40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 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연구」 연구보고 R4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석두, 황의식. 2002. 「농지소유 및 이용 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보고 R44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세익 외, 2001,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 이동필 외, 2002, 「농촌지역의 정보화 실태와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4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연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농업전망 2003」.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농업·농촌경제동향」. 2002 겨울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2002.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 결과」



연구자료 D170

2002년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2003. 3.

발 행 2003. 3.

발행인 이정환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